

제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2. 19(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4차 위원회 -

2020. 2. 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2. 19(수) 14:00~16:00

□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6층

□ 참석대상 : 위원장, 당연직위원(5), 위촉위원(19)

□ 주요 내용

- (보고안건 1)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보고안건 2)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안)

□ 진행 순서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15~15:00 (45')	○ (안건 1) 2020년 농특위 운영계획(안)	사무부국장
15:00~15:45 (45')	○ (안건 2)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안)	농산어촌 청년희망위원장
15:45~16:00 (15')	○ 위원장 마무리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회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 **보고안건 1** **1**

-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보고안건 2** **55**

-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안)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020. 2. 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 ☐ 목 차 ☐ ☐ ☐

I. 위원회 일반현황	5
II. 2019년 운영실적	6
1. 논의의 틀 마련	6
2. 농정틀 전환 위한 개혁의제 논의	11
3. 농어업계 내외부 현장 소통·홍보 강화	20
4. 농정비전 전략 수립 및 농정틀 전환 위한 보고대회 개최	23
III. 2020년 추진방향	24
IV.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26
1. 농어업 분야	26
2. 농어촌 분야	31
3. 농수산식품 분야	35
4. 소통과 협력	40
V. 추진 일정(안)	44
※ 참고자료	47

I. 위원회 일반현황

◆ '농정 틀' 전환을 사명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 설치 근거 법 제정, 위원 위촉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거쳐 정식 출범

□ (배경)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형성과 협의기구의 설립 필요성 대두

○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농정(농어업정책) 틀' 전환 필요

□ (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의 100대 국정과제(83-5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과제 포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시절 농정공약('17.4)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공약

○ 농특위 설치·운영 관련 4건의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소위 심사(안)을 마련('17.11), 본회의 의결('18.12.7)로 확정

* 황주홍의원('16.7), 이개호의원('17.8), 김현권의원('17.8), 위성곤의원('17.9) 발의

○ 농특위 법제화 지원을 위한 민·관 TF*(17.9~18.12) 및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18.5~10)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특위 설치 지원

* BH 농어업비서관실, 농식품부, 농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촌소분과 위원, BH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 KREI, 농업계 전문가 등

□ (출범) '19.4.25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구성(4.25)하고,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 지명(각 4.26, 5.1)

* 위원장(대통령위촉), 당연직위원 5인(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위촉직위원 22인(농어업인단체 대표 10인, 학계 등 관련 전문가 12인)

○ 사무국 사무실 조성 완료(6.3) 후 현판식 겸 제1차 전체회의 개최(6.18)

Ⅱ. 2019년 운영실적

1 | 논의의 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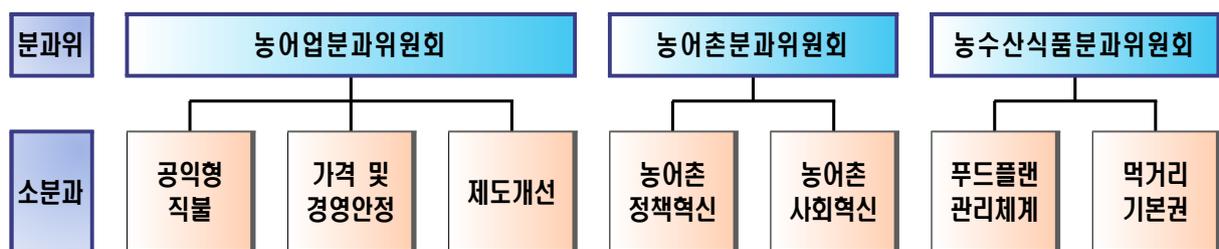
1] 분과위원회 :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물식품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분과위원장 포함 각 20명)
 - 분과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4.30, 민간위촉위원 간담회 등) 지명(5.1)
 - * 농어업분과 김영재 위원, 농어촌분과 황수철 위원, 농수산물식품분과 곽금순 위원
 - 분과위 위원은 농어업인 대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위촉(7.5)
 - * 농어업계 내·외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소비자·시민사회 등 비농업계도 포함
- (농어업분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 생산자 단체(7), 소비자·시민사회(4), 전문가(5), 중앙행정기관(3), 언론인(1) 등으로 구성
 - 직불제 개편, 농산물 가격안정,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등 논의를 위해 분과위내 3개의 소분과 구성·운영
 - ‘공익형직불제’ 소분과는 직불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재정 분석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및 실천 프로그램 마련
 - ‘가격 및 경영안정’ 소분과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과 농가 경영안정 강화 방안 수립
 - ‘제도개선’ 소분과는 농어업인 정의규정 및 농지법 개정 추진으로 정책 대상 재정립과 농지이용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

- (농어촌분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방안 강구
 - 생산자 단체(6), 소비자·시민사회(6), 학계(7), 공공기관(1) 등으로 구성
 - 농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2개의 소분과 구성·운영
 - '농촌정책혁신' 소분과는 지역단위 농촌정책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 등을 수립
 - '농촌사회혁신' 소분과는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신(新) 주체육성과 지역개발 정책 및 자원 연계 방안 마련 추진

- (농수산물식품분과위) 농수산물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국가 먹거리 정책 방향 설정
 - 생산자 단체(6), 소비자·시민사회(6), 전문가(6), 중앙행정기관(1), 언론인(1) 등으로 구성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먹거리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개의 소분과 구성·운영
 - '푸드플랜 관리체계' 소분과는 국내 푸드플랜 수립 동향 및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먹거리기본권' 소분과는 먹거리 관련 법령, 제도 분석을 통해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선순환체계 방안 마련

【 분과위원회 구성 체계 】



2 특별위원회 : 특정 현안 논의

◆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포함 15명)

- 농어업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3개 분야(농협, 청년, 남북협력)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위원 구성

□ (좋은농협위원회)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8.21, 위원장 : 강기갑)

* 위원 구성 : 협동조합 이해관계자(7), 전문가(8)로 위촉

- '조합 분과'와 '중앙회'(허수종 분과위원장) 등 두개 분과로 세분
-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조합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협의 사업과제 발굴 추진

□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청년층의 농산어촌 지역 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주요 의제 발굴 및 논의(8.21, 위원장 : 박경)

* 위원 구성 : 청년(농업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위촉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 청년과 청소년의 지역활동 활성화
- 귀촌하여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등 지역 활동을 희망하거나 농림 어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 도농교류 등 도시지역의 농산어촌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 지원 등

□ (남북농림수산협력특위) 평화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남북 농림수산 협력 방향 논의 (10.15, 위원장 : 김영훈)

* 위원 구성 : 정부기관, 남북협력 단체 및 전문가 등

- 지역사회 기반 농어업·농어촌 개발협력, 신경제지도 연계 남북농림수산 경제협력, 남북농림수산협력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등

3 TF : 별도 분야 논의

- ◆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특정 분과위에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 TF 구성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3개 분야(축산, 산림, 수산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주요 의제 발굴 및 논의

- (축산TF) 축산 관련 의제의 심층 논의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3명으로 경축순환 TF 구성(8.22, 단장 : 박일진)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과 경종부문 작물 재배확대 방안 집중 논의

- (산림TF)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기여 등 산림 관련 주요 의제 발굴 및 논의(8.21, 단장 : 정은조)
 - 목제품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으로 지역순환형 임업구축, 산림계획제도의 체계화 등

- (수산TF) 지속가능한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수산 관련 주요 의제 발굴 및 논의(8.22, 단장 : 이춘우)
 -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하는 수산업 발전 방안

4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 위원회 지원 조직

□ (사무국)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개발, 각급 위원회 회의 준비, 위원회 의결사항 점검·평가 등 위원회 운영 지원

○ (구성) 사무국장 및 부국장을 포함한 4개팀 25명으로 구성

* 위촉위원 1, 파견 공무원 9, 전문임기제 6(가급 3, 나급 3), 외부파견 6, 공무원직 3



* 공무원직 3명

○ (예산) 농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등) 편성

- ('19년) 국무회의 의결('19.5.12)을 통해 일반예비비 2,908백만원 확정

* (인건비) 335백만원, (기본경비) 1,415, (연구용역비) 500, (공사 및 자산비) 658

- ('20년) 3,966백만원 예산 확정

* (인건비) 580백만원, (기본경비) 3,256, (연구용역비) 1000, (공사 및 자산비) 30

○ (사무실)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5.18~6.2)를 거쳐 조성 완료(6.3)

□ (운영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분과위원회간 의제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지원

○ (구성)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부국장 및 위원장 지명* 등(10명)

* 근거 : 농특위 운영세칙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2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 논의

1 분과위원회 운영

-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의제 심층 논의
- ◆ 농정 틀 전환의 주요 의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범농어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및 공론의 장 마련

- (의제 발굴·논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의 농정 전환을 위해 각 분과별 개혁의제 발굴·논의
 - 농특위 출범(19.4.25) 이후,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회의 개최와 활발한 소분과 운영을 통해 농정틀 전환 개혁의제에 대한 심의·조정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 >

구분				실적
(본)위원회				3회
구분	실적	구분	실적	
분과 위원회	농어업분과	소분과	공익형직불제	4회
			가격안정	5회
			제도개선	4회
	농어촌분과	소분과	농어촌정책혁신	4회
			농어촌사회혁신	4회
	농수산식품분과	소분과	푸드플랜 관리체계	2회
먹거리 기본권			2회	

- (공익기여지불 확대) 기존 농정 틀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공익기여지불 확대 방안 검토

- 공익적 기여지불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수산·산림 포함한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 논의
-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직불제 도입 방향 설정, 직불제의 기본체계 설정 및 세부 정책 프로그램 마련 등
 -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개념·관련 용어 정리, EU 및 미국 직불제 개편 사례 분석 및 공익기여 프로그램 발굴 중

□ (농업 재정 및 추진체계 개편)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업 재정구조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마련 중

- 농업재정의 전략적 개혁의 필요성 도출 및 농업정책 설계와 집행에서 중앙-지방 간 전달체계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인식
 - *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 추진체계 재편을 위한 기존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성과지표 발굴 방안 등 논의
- 농정예산 규모의 확대, 예산구조의 혁신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농정 가치 정립을 위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19.9)
 - * 참석자 : (국회) 황주홍·김종회·김현권 의원, (부처) 농식품부·해수부, (유관기관) KREI·재정연구원·농정원, (농특위) 위원장 및 위원 등 150여 명



농특위 현판식('19.6.18)



제1차 농특위 본회의('19.6.18)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19.9.3)

-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농수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틀을 전환하는 대책 마련 논의
 - 현행 수급예측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수급 방향 제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지원(의무자조금 확대)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검토
 - 농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격 및 경영안정 등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19.9) 및 토론회('19.11) 개최
 -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 정부 가격 및 수급안정 정책의 근본 틀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 제시, 생산자에게 농산물 가격교섭력 확대 방안 등 논의

- (농지제도 개선 등) 농어업인 정의규정 및 농지제도 개선으로 정책 대상 재정립과 농지이용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논의
 - 현행 농지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임대차 합리화 방안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인식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 부재지주 및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11.7)

- (농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공간관리) 지자체가 농어촌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안
 - 지자체가 지방사업 이양 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창의적인 민관협치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방안 논의
 - *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19.9.17~9.19) 후 반영
 -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개편, 민관협치 강화, 민간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제도개편 등 보고와 부처 이행사항 제안('19.12.3)
 -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와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와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협약제도 협의('19.10.14, 11.20)

□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의 사회혁신 차원에서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제안

- 농어촌의 사회혁신 촉진과 의료·교육 등 농어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9.12.3 제3차 위원회)' 보고

* 사회적 경제 주체육성, 지역 자원 연계, 판로개척·유통 활성화, 신용·금융 지원 등

- 농어촌 사회적 경제 사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방향 논의 등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19.11.22)

* 농특위 위원,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 관계부처 및 기관 등 참석

□ (농어촌 에너지 전환 모색) 농어촌 그린뉴딜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주민들의 인식전환 등 단계별 에너지전환 방안 논의

-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차원에서 현재 태양광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해결과제 논의 등 농촌태양광 확대 간담회 추진(19.11.14)

* 농어촌공사 및 농협의 태양광 사업 추진사례 공유,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논의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현황 점검, 2020년 논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19.11.26)



제1차 농어촌분과위원회(19.6.18)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19.11.22)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홍보포스터(19.11.22)

□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지역푸드플랜 현황 조사 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논의

○ 범부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비전 및 아젠다) 수립' 검토 중

○ 푸드플랜 및 먹거리기본권 소분과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제 발굴 및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추진

* 국가 차원의 계획·정책 현황 조사 및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체계, 먹거리 기본권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 연구 등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9.11.21)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해 농특위 위원, 관계부처, 유관 기관(국립농업과학원, KREI), 소비자·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의견수렴

* 선진 사례를 통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필요성, 소비자 입장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 국가 먹거리 전략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형태별 장단점 등



제1차 농어업분과위원회('19.7.17)



제1차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19.7.1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19.11.21)

2 특정의제별 특별위원회 운영

- ◆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개혁을 위해 '좋은농협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
- ◆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출범 이후, 농산어촌의 고령화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논의
- ◆ 지속가능한 남북농림수산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중

□ (농협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으로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해 '좋은농협위원회' 구성(19.8)과 개혁의제 논의

○ 농협개혁의 선결과제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19.9.24 제2차 본회의)' 수립* 후, 의결사항 관계부처 이행 촉구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체 조합장 참여 직선제로 하고 연임제는 유보

○ 자주적 협동조직·판매조합으로 조합의 역할 강화,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중앙회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방안 등 논의

* 좋은농협위원회는 조합 소분과 및 중앙회 소분과로 나누어 활발한 회의 개최와 농협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논의 추진

□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지역활동 활성화와 귀촌 청년 지원강화 방안 논의

○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출범(19.9.9) 이후,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등 의제 설정·논의

* 농산어촌 거주 청년 지역활동 지원, 귀촌하여 지역활동을 희망하거나 농림어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 지원강화, 도농교류 활동하는 도시지역 청년 지원 등

-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농산어촌 청년들과의 현장소통 및 자문활동 등 역할 수행을 위해 '청년희망네트워크' 구성·운영

* 현장토론회 토론자로 참여('19년/ 순창·홍천 2회) 및 지역청년 여론조사 등 계획('20년)

- '농산어촌청년희망 현장톡톡(Talk Talk)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산어촌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사례 및 청년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대안 논의

* 제1차(11.7, 전북 순창군), 제2차(11.21, 강원 홍천군)

□ (농림수산 남북협력체계 구축)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출범 ('19.10.15) 이후, 남북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주요의제 발굴·논의

- 경험 소분과 운영을 통해 신경제지도 연계 남북농림수산 경제협력 방향 등 의제 설정

- 남북농림수산협력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과 지역사회의 기반한 남북 농어업·농어촌 개발 협력 방향 등 의제 설정

* 인도·개발협력(북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협력(상호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제도(원활한 협력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등) 소분과 운영

- 평화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남북농림수산협력의 위상 및 역할 등 새로운 협력모델 정립과 실행전략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8.21)



제1차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9.9)



제1차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10.15)

3 축산·산림·수산업 T/F 운영

- ◆ 환경친화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 T/F 출범 이후,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
- ◆ 산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산림 T/F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마련
-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수산 T/F 구성·운영 중

□ (환경친화형 축산) 축산 T/F 출범('19.8) 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19.12.3 제3차 위원회)' 수립

*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 자원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경종농업 생산작물(사료) 축산업 이용 활성화 등

- 축산의 틀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축산분야 개혁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부처(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와 협의회 개최('19.11.13)
- 축산부문 유관기관, 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경축순환농업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9.12)

□ (산림의 지속가능성 제고) 산림분야 단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출범('19.8) 후, 저탄소사회에 기여하는 임업 실현 등 논의

- '산림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산림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산림정책토론회 개최('19.10.29)
- 한국형 산림자원순환 모델 개발 및 산림경영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19.12.3 제3차 위원회)' 수립

* 국산목재 제품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 바이오매스의 로컬 에너지 이용, 산림의 이용 촉진으로 임업 활성화, 산림경영 지원강화, 산촌의 활력증진 등

- (수산분야 의제 논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설정 등 수산 관련 주요의제 발굴 및 논의
 - 수산자원 감소, 어촌의 고령화, 어가 소득 감소 등 수산업과 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전환 제안을 위해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농정비전 및 전략 수립에 수산분야 비전(안) 검토의견 제출 및 비전(안) 검토회의(10.28, 11.13.) 개최

4 주요 의제 심층 논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 농정 틀 전환 개혁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검토를 위해 정책연구 추진
- ◆ 연구과정 및 결과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반영

-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연구(농정예산 분석·평가, 추진체계 개편)와 분과위(특별위) 및 T/F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총 13건)
 - 농림수산 관련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연구와 분과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
 - * 연구용역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정기회의 개최(3회) 및 연구용역 추진현황 관리
 -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운영 규정」 수립·시행('19.11)
-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운영
 - *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9.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11.22),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2.11) 등

- ◆ 범농어업계와의 현장소통으로 농정틀 전환 인식에 대한 기반 조성
- ◆ 단체·언론사 등 직접소통으로 농정 현안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 대국민 소통·홍보 체계 구축으로 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확산 계기 마련 등

□ 범농어업계와 소통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 농어업인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타운홀미팅 방식의 집단회의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도출
 - * 지역별로 농어업인,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 참여
 - * 제주(10.30), 전북(11.1), 경북(11.4), 경기(11.13), 충남(11.15), 전남(11.20), 강원(11.28), 충북(11.29), 경남(12.5)

□ 미래 농정비전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국의 농정 개혁사례를 통해 '농정 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11.26, 서울)
 - EU 농정개혁의 배경과 미래 농정방향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농정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 모색
 - * 농어업계 및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국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250여 명(11.26, 서울)



제주 타운홀미팅(10.30)



전북 타운홀미팅(11.1)



농특위 국제심포지엄(11.26)

□ 농정개혁 관련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농특위 주요의제 관련 범농어업계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

* 농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9.3),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마련(11.6), 농지 제도 개선 방안 모색(11.7),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11.22) 등 토론회 개최

□ '농정 틀 전환 전국협의회' 구축 및 운영

- 농정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위원회 간 주요의제 협의 및 상생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9개도 농정관련 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협의체 회의 정례화,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 협력방안 등 논의

□ 범농어업계와 간담회 개최

- 농축산·산림·수산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농정틀 전환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 방안 모색

구분	일자	참석현황		주요 내용
		단체	인원	
축산단체	7.31	14개	27명	• 축산 현안 및 축산TF 운영 관련 의견수렴
환경농업단체	8.6	9개	12명	• 친환경농업 관련 현안 및 농특위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산림단체	8.8	18개	27명	• 산림 관련 주요의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모색 등
여성농업인단체	8.16	8개	16명	•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복지, 일자리창출 등 관련 의견수렴
수산단체	8.23	14개	22명	• 수산 관련 주요의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모색 등
농민의길	9.9	5개	15명	• 농정틀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등
농민단체	11.12	3개	10명	•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등 긴급현안 방안모색 등

□ 농어업계 외부와 소통채널 확대

- (오피니언리더 현장탐방) 농정들 전환을 위한 언론·방송·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리더 구성 및 농어촌 현장 탐방(11.9.~10.)
 - * 농어업계 및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예술계, 언론, 전문가 등
- (국민 참여 농정 공감 한마당) 농정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대국민 농정 공감 콘텐츠 전국경진대회 추진(11.23.)

□ 다양한 매체활용 콘텐츠 공유·확산

- (온라인) 뉴스레터와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홍보로 농어업계 내외부 및 국민과 상호 소통 강화(수시)
- (신문·방송)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전 지역기자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10~12월, 8회), 매체광고(11~12월, 3회), 방송사 인터뷰(수시) 등



농정들 전환 전국협의회(9.3)



오피니언리더 농정현장 탐방(11.9)



'농정을 들자' 전국경진대회(11.23)

□ 농정들 전환 위한 선진사례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강화

- (EU 협력 확대) 농업재정 및 추진체계, 직불정책 등 농특위 핵심 과제 관련하여 EU 농업선진국의 선행 사례 조사·연구
 - * EU집행위원회, 프랑스 농림부, 독일연방 농업식품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농촌부 등 방문 ('19.10.19~10.27)
- (대만 국제 워크숍)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식품·농업 개혁 비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대만, 일본 등과 농정개혁방향 공유
 - * 대만 학교급식 요리경연대회 및 대만 식품·농업개혁 비전 워크숍 참석('19.10.19~10.22)

4

농정비전 전략 수립 및 농정 틀 전환 위한 보고대회 개최

- ◆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제시
- ◆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 제시

□ 농정비전 전략 수립

- 농특위 출범에 따른 농어업인·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농수산물 수급 불안, WTO 개도국 지위 변화 등으로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에 농특위는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 주민의 사회협약 제안, 국민과 농어민이 함께 행복한 농정비전(4대 이념*, 12대 개혁 아젠다) 제시

* 사람·환경중심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

□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개최

-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 제시
- **VIP** 임석 행사로 관계부처, 자치단체장 및 농정거버넌스 협의체 대표,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농정 틀 전환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19.12.12)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12.12)

Ⅲ. 2020년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 2020년은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과 로드맵 제시

□ 농정 틀 전환 관련 VIP 메시지(19.12.12)를 포함한 '농정 비전' 세부 이행계획 마련 추진

- 단기 과제는 농식품부·해수부 등 중앙부처, 농특위는 중장기 과제의 로드맵 제시 등으로 역할 분담

- 특히, 거버넌스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20.上)

- * (중점과제) 공익기여지불 확대(재정구조 개편 포함),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등

□ 기 논의 중인 개혁과제*의 조속한 안전화, 신규 논의 과제** 발굴 및 의결 안전***의 부처 이행상황 점검·평가 지속 추진

- * 농협개혁, 청년, 남북협력, 산림 및 수산분야 개혁 등

- ** 농어촌여성 지위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등

□ 농정 틀 전환 관련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 내용을 '사회협약'을 통해 대내외 공표

-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확대(9개→10개 권역)하고 전국 규모의 '사회협약식' 개최 추진(20년말)

◆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의 사회협약

- (국가·시민사회)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의 책임을 질 것
- (농어민·농어촌주민)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

2

추진 목표 및 과제

목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정 틀 전환

추진 전략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의 제안 및 확산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추진 과제

농어업 분야

- ① 공익기여지불 확대
- ②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강화
- ③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농협개혁
- ④ 지속가능한 축산 비전 제시

농어촌 분야

- ① 살고 싶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
- ② 농어촌 사회의 새로운 주체 형성
- ③ 산림 분야 개혁 방안 마련

농수산물 분야

- 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 ② 범부처 및 시민 사회 협업을 통한 푸드플랜 확대
- ③ 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
- ④ 수산분야 개혁 방안 마련

소통과 협력

- ① 범농어업계 내외부와 정책현장 소통 강화
- ② 다매체를 활용한 정책공감 확산
- ③ 대외협력 사업의 영역과 역량 강화

전국 규모의 사회협약식 개최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협약’을 통해 대내외 공표』

IV.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 농어업 분야

- ◆ 사람과 환경 중심의 포용농정, 지속가능한 농정 구현을 위해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강화
 - 농식품 재정구조 추진체계 개편,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농업인 정의규정 정비 등
 - * 대통령 말씀(19.12.12) : 직불제 개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등
- ◆ 농협개혁 및 축산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전략 마련

1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기여지불 확대

- 농정 재정구조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수립
 - 농정 틀 전환(지속가능성·포용·혁신)에 부합하는 농정 예산구조 및 농정 추진체계 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20.5)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및 다기능성 기반 농어업 예산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지역 중심 농정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지방의 역할 재배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의 연구결과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추진(20.上)
 - 예산구조 및 농정 추진체계 개편 로드맵 제시(20.下)

□ 공익기여지불 확대 방안 마련

- 농어업·농어촌의 생산과 지역개발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다기능성 발휘에 대한 지불 확대* 방안 논의('20.上)

* 농정예산에서 공익기여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공익기여지불제 세부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론의 장 마련('20.上)

- 임업·어업, 산촌·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수산 분야 직불제 확대 검토 및 산림분야 직불제 도입 방안 마련('20.下)

□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구축

- 농지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는 농지실태 조사방안과 농지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소유 및 이용 경작자 실태, 필지별 재배작목 및 재배방법, 토양 정보 등)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제도 개선 대책 수립('20.下)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억제 방안,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실화 및 제도보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검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 보완 등

* 농지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추진

- 경자유전 원칙 추구하고 농업인의 농지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농지 보전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여론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농업인,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 법령* 및 정책대상으로 농업인 정의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농업인 정의 정비방안 마련('20.下)

* 농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며 의제 논의 추진

* 농식품부, KREI, 충남연구원 등에서 농업인 정의 자체 연구 예정('20.2월~)

-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의 일반적인 농업인 기준과 직불제 등 정책 대상자로서의 농업인 기준 등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향 마련

②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강화

□ 농산물 가격안정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

-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도록 기존 가격 및 경영안정 정책의 틀을 보완하고 정책 대안 제시('20.下)

* 쌀 변동직불제 폐지 후 농산물 전반의 가격하락 우려 해소,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수입농산물 관리 방안 등 논의

-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및 공론의 장 마련('20.上)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체계(의무자조금단체 구성 등),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및 수급예측 고도화(통계조사방법 개선 등) 구축 논의

- 가격안정대책 관련 정부·생산자조직·농협 등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농업 선진국의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발굴·논의

3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개혁

□ 농협개혁의 청사진을 위한 비전 및 혁신과제 제시

○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정체성 정립, 농정틀 전환을 위한 농협 비전 및 혁신과제* 마련(‘20.下)

- 조직구조(조합원·조합·중앙회), 사업(경제·교육지도·신용), 사회가치(농협의 역할과 과제) 등 농협개혁을 위한 부문별 혁신과제 제시

- 좋은농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간담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의안 검토·조정

* 정책연구용역 및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으로 향후 농협개혁 추진을 위한 실행력 담보

- 혁신과제에 대한 농협 관계자(조합원 등), 농식품부,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검토 추진,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마련

* 대내적으로 농협개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소통을 통해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 환기 및 사회적 공론화 유도

□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추진

○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19.9.24, 제2차 위원회)에 대한 이행 촉구와 관계부처 추진사항 지속 점검

-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 전체 조합장 직선제 도입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및 농협법 개정

4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한 축산의 청사진 마련

-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종부문과의 연계,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방안, 축산분야의 기업화 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제시(20.下)
- 지속가능한 축산 비전 마련 정책연구를 통한 심층 논의, 정부 및 산학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안전화 추진

□ 경축순환 실무협의단 운영

-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19.12.24, 제3차 위원회)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실무협의단'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점검 추진(분기별)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기관·이해관계자 등과 의결사항의 세부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협력·소통 창구 역할
- 정책방향(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 정리 및 실행방안 마련
- 양분관리제, 에너지자원화 관련 해외 농축산업 선진 사례조사 및 기관방문 면담으로 축산양분관리 의견 교환 및 정책시사점 발굴(20.上)

◆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위한 과제 논의 강화 및 개혁방안 마련 추진

○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공간관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 대통령 말씀('19.12.12) : 삶터이자 쉼터의 공간계획, 사회적 경제, 농어촌 그린뉴딜 등

◆ 청년세대, 여성농업인, 산림분야 과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틀 제시

1 살고 싶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어촌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유도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실천계획을 토대로 이행관리계획 수립(2월) 및 점검(분기별)

* 주요과제 : 지방이양 이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축소 방지 대책 강구(부처 공통),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행안부), 민관자치 역량강화 및 법·제도 개편(농식품부),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추진체계 개편(부처공통) 등

* 부처 추진계획수립 접수('20.1월) → 이행관리계획 수립('20.2월) → 추진실적 점검·평가(분기, 수시) → 추진실적 제출, 운영위 보고('20.하반기)

□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회 공감대 형성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체계에 부응하며, 농어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 정책의 방향 마련

* 정책연구를 거쳐 유럽의 코크선언에 준하는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전환과제, 추진전략 등 마련('20.12)

- 농어촌다움 유지 및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극대화, 공동체성 강화 등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도출
- 농어촌 주민과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천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 제시
- 정책연구와 연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기관, 지자체 관계자 및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연중)

□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생태·자원·환경보전을 포괄하는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지원(‘20.下)
- 농어촌정책혁신 소분과 중심으로 농어촌 공간관리에 관한 의제 선정 후 전문가, 현장,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화
 - * 공간계획(국토계획의 체계성), 농촌협약제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의 관계 등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9.12.3, 제3차 위원회 토론회 과제)에 관해 심층 검토 후 안전화 추진(‘20.上)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제도를 연계한 정책 검토 및 업무협약 지원(‘20.下)

□ 농어촌 지역의 재생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및 정책방향 도출

- 농어촌에너지 관련 현 상황 파악 및 논의주제 설정을 위해 농촌 에너지 포럼 관계자 등 전문가 사전 간담회 추진(‘20.1~2월 중, 2회)
 - * (논의주제 예시) 기후변화 대응, 농어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촌에너지 효율화, 농어업에너지 세제 개편 등

-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구성 및 운영
 - 논의주제별 포럼 개최를 통해 농어촌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론화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방향 설정
 - *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20년 중 5회(3·5·7·9·11월) 내외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방향을 통해 제안된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농어촌분과 의제 도출 추진('20.下)

2 농어촌 사회의 새로운 주체 형성

□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력 제고

-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의 현장토론회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20.上)
 - * 위원회·기획단 회의 개최, 현장톡톡 토론회·청년네트워킹을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워크숍 등 추진을 통해 안건화
- 유형별 승계농·창농, 사회적 경영승계, 청년 참여형 마을 영농 및 공동 창농, 농지 확보 등 청년농 정책 개선방안 마련('20.上)
-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방안 마련('20.下)
 - * 중앙·지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관련 통계 정비, 문화·복지·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사업과 주체의 유기적 연계

□ 농어촌 여성의 동등한 지위보장과 삶의 질 향상 과제 논의

- 농어촌 여성 포럼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여성단체, 전문가, 기관 등과 참여주체·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모임 개최(‘20.1.)
 - * 전여농, 한여농, 여성어업인,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청년여성농업인, 먹거리연대, 전문가, 농식품부, 농진청, 농특위 위원 등
-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 여성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 구성 및 운영방향 마련(‘20.上)
 - * (가칭)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준비위원회 구성
- 여성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논의(‘20.3.~10.), 관련정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의제 도출(‘20.下)
 - * 여성복지, 다문화 여성, 양성평등 및 권익향상, 4차 산업혁명 대응 여성역할과 기술역량, 평생교육, 여성조직, 삶의 질 관련 여성정책 등 논의의제 도출

③ 산림 분야 개혁 방안 마련

□ 산림정책의 틀 전환 기반 마련

- 국내 산림의 경영구조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마련(‘20.下)
 - * 공익중심의 국·공유림 경영 방안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산림 T/F 회의 개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을 통해 안건화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 산지소유자, 전문가들과 수시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3회 이상)
-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19.12.3, 제3차 위원회)의 정기적 이행점검·평가 실시(분기별)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기반 지원, 국산목재 제품의 이용증진,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등

- ◆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수립·제시
 - 먹거리기본법 제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 신규 시범사업 발굴 등
 - * 대통령 말씀('19.12.12) :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행을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기초 단위 먹거리연대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추진

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 범부처 통합계획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제시('20.下)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어젠다 설정 후 실행계획 수립('20.上)
 - * 실행계획 수립 후 현재 사업과 비교·분석, 담당 부처 협의 등
 - 정책영역별 구성요소, 중점추진과제, 세부사업 도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부합하는 현행사업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 * 정책영역과 구성요소 등은 전문가·정책관계자 등이 참여한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에서 선정
 - ** 정책영역(안)
 - 먹거리 보장 : 식량안보, 식품안전, 먹거리복지, 건강·영양, 교육·문화·정보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순환, 식품안전 등
 - ***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식품안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건강·영양) 등 기존 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실행계획 도출

□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안) 마련

- ‘(가칭)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 복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 등 기본 가치 확립
- 먹거리 정책 관련 부처별 법률의 연계와 먹거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통합 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 법령(안) 마련(‘20.下)
 - * ‘(가칭)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관련 법령(공공급식, 학교급식, 식생활 교육지원 등) 제·개정 제안

□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로서 지역 푸드플랜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자체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자체 푸드플랜의 일관성 확보
 - * 푸드플랜 수립 완료 및 진행 중인 지자체 : (‘19년) 46개 → (‘22년) 100개
- 공공급식 및 군대 급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및 취약 계층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지역 내 먹거리를 통한 먹거리 복지 확대
 - *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등 협조

② 범부처 및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

□ 범부처 통합성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

-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해 먹거리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20.上)
 - * 범부처 참여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 부처합동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계획(안)’ 보고 추진

□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민-민, 민-관 간담회 추진

- 국가-광역-기초지자체와의 일관성 확보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 먹거리위원회 워크숍 개최('20.上)

* '농정틀 전환 전국협의회'와의 연계로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전국 및 지역별 먹거리연대,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20.上)

* 관련부처 공무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 간 '민민, 민관, 관관' 협력체계 구축

□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 타운홀미팅과 연계하여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및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20.上)

- 먹거리 현장의 관점에서 부처별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의 연계와 통합적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부처 정책사업의 분석 등)

* '2020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의 주요 과제로 논의

- 전국 먹거리연대 관계자 및 지자체 푸드플랜 담당자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 대한 의견수렴('20.上)

*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추진하여 지역 푸드플랜 현황 파악(2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대국민 보고회 개최

-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부처 함께 '먹거리 사회협약'으로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발표 행사 추진('20.下)

*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푸드플랜 종합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개최

3 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 로드맵 마련

- 평화경제의 기초에 부합하는 남북농림수산협력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타 분야와 상호 협력·연계하여 '남북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 전략(안)' 수립('20.上)
- 정부·지자체·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핵심의제 검토·조정
- 북한의 농어업정책 수요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농어업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

□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분과 중심 운영

- 인도개발협력 소분과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 SDGs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개발협력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발굴
 - * (북한) 지속가능한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0개 이행지표 제시('19.10.15)
- 경제협력 소분과는 남북경협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칭)남북농림수산경협지원센터' 설립 등 경협 참여기업 지원 방안 검토
- 제도 소분과는 남북농림수산협력의 지속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 * 인도개발협력 및 경협 소분과에서 발굴한 핵심 남북농림수산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4 수산분야 개혁 방안 마련

□ 수산물 생산관리 혁신기반 제시

- 수산 T/F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근본적인 틀을 전환하기 위한 어업, 양식분야 전략 제시

- * 연근해 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수 감축, 과학적 평가를 통한 자원관리 및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 수익이 수산분야 고용과 설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

- ** 해조류, 패류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어류양식의 경쟁력을 위해 규모화 및 외해화, 친환경적인 사료 개발보급, 수산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등 제시

- 주요 의제에 대한 최적의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산학연 연계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수익성 있는 수산업 확립' 정책연구용역 추진

□ 농특위 수산분야 비전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농식품분야와 공동보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업단체, 전문가 및 해수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

- 이행계획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진행사항 정기점검 및 보완 등 관리

4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

- ◆ 범농어업계와 정책소통 강화 및 농어업계 외부와 다채널 협력 확대
- ◆ 농어민·농어촌주민 및 국가·시민사회 간 사회적 협약의 기틀 마련
- ◆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사회협약으로 농어업계의 주요 현안 안정적 연착륙 지원 및 범농어업계 사회협약식 추진

1 범농어업계 내외부와 정책현장 소통 강화

□ 2020년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확대·발전

- '19년 타운홀미팅을 확대하여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묶고 생산자·소비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직자가 참여하는 권역별 타운홀미팅 추진

* 권역별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200여명 참여, 농정 틀 전환 주요 의제 논의 ('20.5.~12.)

- 농정 틀 전환 과제를 기반으로 공익기여지불, 국가·지역 푸드플랜, 농수산물 가격안정, 경축순환농업 실현, 농수협 개혁 등 논의

□ '현장에 답이 있다, 농특위가 간다'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

- 농특위 주요 의제에 대해 분과위(특별위), T/F 활동과 연계하여 농어업인, 시민단체, 산학연 등과 농어업 현장에서 현장간담회 개최

* 정책팀별 계획 및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20.5.~)

2 다매체를 활용한 정책공감 확산

□ '농정을 틀자' 지속 추진으로 범국민 인식 및 관심 제고

- 국민 참여 제안경연대회인 '농정을 틀자' 연속 개최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농정 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국민 참여 예심을 통해 본선진출자 20여 팀을 결정하여 최종 본선 개최('20.11.)
 - * 대회 절차 : 전국 공모(분야 세분화) →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 국민참여 예선 → 본선 및 시상(2020 농업박람회 연계)

□ '農뜨락 2020'(오피니언리더 농정현장탐방) 확대

-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농어촌 현장체험과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가 시각의 다양한 농정 변화 방향 모색
 - *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권역 중심으로 현장탐방(4회, 분기) 및 평가회(1회) 실시
- 학술·문화·방송·언론·법조·종교계 등의 비농업계 오피니언리더를 자문단(서포터즈, 50여 명 내외)으로 구성하여 농어촌 정책탐방 추진

□ 홈페이지 리뉴얼 및 대국민 온라인 소통·홍보 강화

-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면 리뉴얼 및 SNS 채널 확대, 콘텐츠 강화를 통해 온라인 소통·홍보 활성화('20.3.~)
 - * 홈페이지 : 전면 리뉴얼 및 유지보수, 기능 추가(국민제안·핫라인 등)
 - * 온라인 : SNS 채널운용 및 콘텐츠 제작·배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

3 대외협력 사업의 영역과 역량 강화

□ '농정 틀 전환 전국협의회' 활성화

- '19년에 결성된 '농정 틀 전환 전국협의회'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와 소통·협력 강화,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에 대한 주도적 역할 부여('20.2. ~)

* 분기별 운영위 및 집행위, 워크숍 운영·추진

- 권역별 타운홀미팅 추진 협업 및 농정 거버넌스의 운용사례 공유 등

□ 민관 협력·소통 지속 강화

- 대내외 소통 강화와 촘촘한 협력망 구축을 위해 농어업·시민사회 단체, 유관기관, 기자 등과 정기간담회 및 현안별 긴급 간담회 지속 추진(수시)

- 농어업단체는 주요 연대조직과 의제별 간담회 수시 개최, 환경·여성·소비자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기획 운용, 국회와 협력 강화 등

* 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여성농업인 연대회의, 축단협, 수산생산자 연대모임, 수산업협의회, 산림단체연합회, 청년농업인단체 등

4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식 개최

□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 제안

- 국가 및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의 책임 이행

- 농어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

□ 사회협약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한 공론의 場 마련
 - * 농어업단체, 소비자·환경·여성단체, 노동단체, 언론계, 시민사회단체(YMCA, 경실련, 참여연대), 생협, 교육청 등과 사전소통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개최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권역별 타운홀미팅과 연계하여 주요 개혁의제에 대한 사회협약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農뜨락’, ‘농정을 틀자’ 등 농특위 주요 대외 행사와 언론 인터뷰, 기고, SNS 등 활용하여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추진

□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식

-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타운홀미팅의 성과 공유 및 농어민-시민사회-국가 간 사회협약 체결 행사 개최('20.下 또는 '21.上)
 - * 참석대상 : 국회, 정부, 농림어업단체, 타운홀미팅 참여자 등 1,000여명 규모
- 공익기여지불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지지자 확보를 위해 협약 공식화를 위한 선언적 공표 행사 추진

V. 추진 일정

정 책 과 제		일정	비고
① 농어업 분야			
1.1.	재정구조 개편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수립	~'20.上	
1.2.	수산직불제 확대 검토, 산림분야 직불제 도입방안 마련	~'20.下	
1.3.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20.下	
1.4.	농업인 정의 정비 방안 마련	~'20.下	
1.5.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정책 제시	~'20.下	
1.6.	농협 비전 및 혁신과제 마련	~'20.上	
② 농어촌 분야			
2.2.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방향 마련	~'20.下	
2.3.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20.下	
2.4.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20.上	
2.5.	농어촌 에너지 전환 방향 마련	~'20.下	
2.6.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20.上	
2.7.	농어촌 여성 관련 정책 의제 도출	~'20.下	
2.8.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마련	~'20.下	
③ 농수산식품 분야			
3.1.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20.下	
3.2.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안) 마련	~'20.下	
3.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20.下	
3.4.	남북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 전략(안) 수립	~'20.上	
④ 소통과 협력			
4.1.	권역별 타운홀 미팅 개최	'20.5~12	
4.2.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20.5~	
4.3.	국민참여 제안경연대회 '농정을 들자' 개최	'20.11	
4.4.	'農뜨락 2020'(현장탐장) 개최	분기별	
4.5.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식 개최	'20.下	

【위원회별 개최 일정(안)】

구 분	추진 일정(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 위원회		4차 본회의			5차 본회의			6차 본회의			7차 본회의		
농어업 분과위원회	3차			4차			5차	워크숍		6차			
농어촌 분과위원회		4차			5차				6차		7차	워크숍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	세미나	5차		워크숍 및 분과위			7차		8차		9차		10차
좋은농협 위원회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농산어촌청년 희망위원회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남북농림수산 협력위원회	2차		3차				4차		5차		6차		
산림 T/F	5차	6차	현장 토론회	7차	현장 토론회	8차	현장 토론회		9차	현장 토론회	10차	워크숍	
수산 T/F	4,5차	6,7차	8차	9차	워크숍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2020 전국 순회 집단지성 공론속의장 일정(안)】

1단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적 협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농어민단체 간담회		
2단계	사회적 협약을 위한 기본 조문 구성 → 사회적 협약 기안 작성		
2월말까지 용역 계약 → 3월 중 용역업체 확정 → 4월 중순까지 세부시행방안 확정			
3단계 (5~9월)	전국 순회 집단지성 공론속의회 개최 (전국 10개 권역별로 총 10회 개최)		
	개회식 (14:00-14:10)	10'	박진도 위원장 인사 지자체장 인사 내외귀빈 소개
	주제영상 (14:10-14:15)	5'	영상상영
	기조발제 (14:15-14:30)	15'	지역 농업 전문가
	전문가토론 (14:30-14:45)	15'	지역 농업전문가 3명 (각 5분)
	난상토론회 (14:45-15:15)	30'	생산자팀 VS 소비자 팀
	휴식 (15:15-15:20)	5'	- 휴식 및 좌석 재배치
	원탁속의회 (15:20-16:20)	60'	생산자 + 소비자 그룹
	타운홀미팅 (16:20-16:50)	30'	박진도 위원장 및 지역 농업 전문가
기념촬영·정리 (16:50-17:00)	10'	참여자 전체	
4단계 (10월)	전국 종합 대토론회	1박 2일	10개 지역별 15명씩 150명 + 농특위 50명
5단계	전국 참석자 온라인 서명운동	10 월	전국 참석자 및 관계자
6단계	전국민 서명 캠페인 전개	11월 11일 선언	전 국민
7단계	사회적 협약식	2021년 3월 초	

* 사회적협약 후속조치 - 농특위 1기 백서 발간 → 농특위 1기 마무리

참고자료

〈참고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개요	49
〈참고2〉 농정 비전(12대 과제)	50
〈참고3〉 「농정 틀 전환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결과	52
〈참고4〉 농특위 예산 현황	54

참고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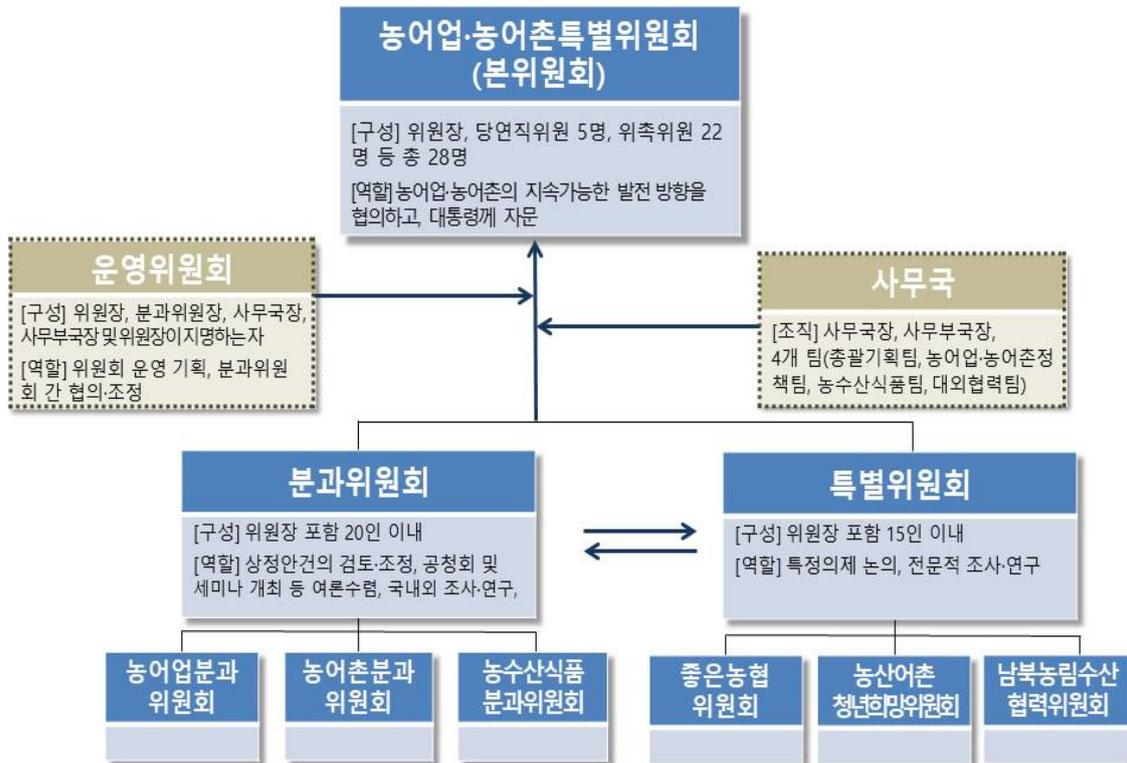
【참고】 농특위 운영 개요

- (목적)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 경제의 기반인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4.25 시행)
- (기능)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이행을 촉구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법 제2조)

< 주요 협의 사항 >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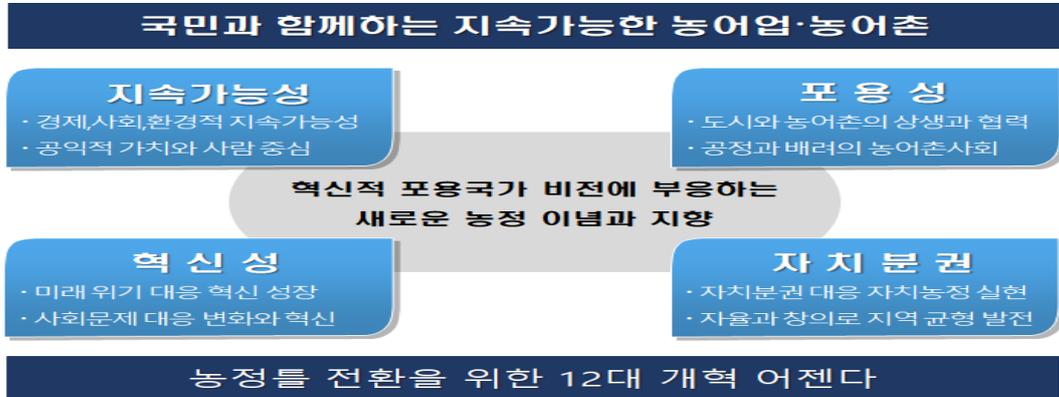


* 분과위원회의 소관 의제 관리를 위해 소분과 또는 TF(축산, 산림, 수산) 운영

참고 2

농정 비전(12대 과제)

□ 새로운 농정의 비전과 4대 지향점



□ 12대 개혁 어젠다

1) 공익기여지불 예산제도로 전환

- 직불예산을 농업재정의 30% 이상으로 확대
- 투입재 보조형 사업 등 축소하는 농정예산 내부 구조조정과 점진적인 농정예산 증대를 통한 외부 지원 확대로 직불제 재원 마련

2) 농수산물가격과 농어가경영의 안정은 국가 기본책무임을 명확화

- 가격과 수급안정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로 기본적인 안정책 제공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등 생산자 조직화와 데이터에 기반한 수급 관리가 가능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3)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촉진

- 농어촌경제의 활력(사람·일), 농어촌사회의 혁신(공동체), 쾌적한 정주 환경과 깨끗한 농어촌환경 보전(공간·환경)으로 정책목표 다원화
-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육성, 유희 자원 활용 등 세부 방안 마련

4) 청년·여성 등 농어촌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 형성

5)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 확보

6)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 농어촌에너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 등 기여
- 화학비료 절감과 연계한 토양양분관리제 도입으로 경축순환형 축산 전환

7) 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체계 확립

-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 지역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순환먹거리체계를 구축
- 저소득층 취약계층 식료품비 지원사업 등 먹거리복지 프로그램 확대

8)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 보호

-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 비농민의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실경작 임차농의 농지이용권 보호

9)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

- 국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부응하는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포괄 어젠다 제시, 지자체가 실천계획 수립, 상호 계획협약체결
-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

10)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 농협법으로 정한 목적, 제13조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책임지는 지역농협, 제113조 회원조합이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중앙회 정체성 확립
-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농어촌지역 지역협동사회경제체제 구축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

11) 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로 평화경제의 초석 마련

12) 지속가능 농정과 분권 농정 실현을 위한 조직 제도 개혁

□ 3대 중점 추진전략

- 1) 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융자제도 개선
- 2) 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 3)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반 정비

1. 행사개요

□ 행사명 :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 슬로건 : 多 듣고 多 함께! 농정전환

□ 목적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및 공유

• '19.4월 농특위 출범 이후 농어업인 및 국민들과 소통을 통한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를 공유하고, '혁신'과 '포용'을 통한 새로운 농어업·농어촌 희망 메시지 제시

□ 일시·장소 : '19.12.12.(목) 10:00 ~ 11:10, 한국농수산대학 대강당

□ 참석 : 약 750여명

* 농특위위원, 9개도 대표(지역 타운홀미팅 참석자), 지자체장(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농어업인단체, 국회의원(5명), 유관기관 관계자, 농수산대·지역 농고생 등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농정 성과 및 정책방향 제시(VIP 모두 말씀)
- 타운홀미팅을 통한 농어업인·국민과의 소통, 농특위 활동 경과보고(농특위원장)
- 참석자 및 현장 농어업인(영상 인터뷰) 건의와 답변(농림부·해수부장관)
- 농정 틀 전환 퍼포먼스(VIP·장관·농특위원장·참석자 등)

2. 행사 결과

□ VIP 모두 말씀 요지

○ 농어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및 농정 성과 공유

- (진단)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상생 공동체, 식량안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중요성 강조
- (성과) ▲농특위 출범, ▲쌀값 회복 및 쌀 관세화 협상 성공적 마무리, ▲가축방역 강화로 질병 감소, ▲농가소득 증가 등

○ 농정 틀 전환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제시

- (1)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구현(▲공익형직불제 개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

- (2)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생활SOC 확충으로 3·6·5생활권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귀농어·귀촌 통합플랫폼 서비스, ▲청년 창업농·여성농업인 지원, ▲농어촌 그린뉴딜 및 재생에너지, ▲어촌뉴딜 300 등)
- (3)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자율적 수급조정, ▲생산자 조직화지원, ▲공동브랜드 마케팅 확산,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4) **스마트 농어업 추진**(▲농어업 전반의 스마트화·데이터화, ▲식품산업 육성)
- (5)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노력**(▲취약계층 신선농산물 공급 등 먹거리 보장, ▲지역 푸드플랜 확대, ▲국가 푸드플랜 수립)

□ 농특위 위원장 말씀 요지

- (농특위 활동경과) 13개 논의 틀로 총 86회 회의와 농어민·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원적 기능 농정을 실현하여 국민행복에 기여
- (타운홀미팅) 9개도 순회 결과 농정 틀 전환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았으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과 공익형 직불의 확대가 핵심과제로 제기
- (사회협약)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 제안

□ 참석자 및 현장영상 인터뷰 건의와 답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 (윤수경, 해뜨는 농장/ 김성만, 경남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지급 확대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선진농정을 위한 과감한 변화개선 필요
→ 직불금 예산 2조4천억원 반영, 현장의견 수렴후 구체적 계획 수립·실행
- (조광윤, 한농연 전남부회장)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수급안정
→ 파종재배·수확단계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의무자조금 통한 수급조절
- (임병목, 완주로컬푸드조합 이사)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및 확산
→ 로컬푸드가 양적 확대보다 지역푸드플랜으로 발전하도록 노력
- (이창미, 백미리어촌계 사무장) 어촌뉴딜300 등 농어촌 활성화 지원
→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한 어촌 재생, 어촌관광 및 귀어귀촌 지원 확대

3. 향후 계획

- VIP 말씀 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대국민 소통과정을 거쳐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20.1.~)

참고 4

위원회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19예산('19.5~12) (예비비, A)	'20예산 (B)	증 감	
			(B-A)	%
□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운영지원	2,908	3,966	1,058	36.4
□ 비목(합계)	2,908	3,966	1,058	36.4
○ 기타직보수(110-02)	281	485	204	72.6
○ 상용임금(110-04)	53	95	47	88.7
○ 일반수용비(210-01)	198	421	223	112.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3	99	36	57.1
○ 특근매식비(210-05)	13	21	8	61.5
○ 임차료(210-07)	306	473	167	54.6
○ 유류비(210-08)	9	14	5	55.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8	65	27	71.1
○ 복리후생비(210-12)	5	5	-	-
○ 일반용역비(210-14)	366	700	334	91.3
○ 기타운영비(210-16)	6	10	4	66.7
○ 국내여비(220-01)	78	112	34	43.6
○ 국외업무여비(220-02)	69	69	-	-
○ 사업추진비(240-01)	56	65	9	16.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79	94	15	19.0
○ 직책수행경비(250-02)	76	112	36	47.4
○ 일반연구비(260-01)	500	1,000	500	100.0
○ 고용부담금(320-09)	53	96	38	71.7
○ 공사비(420-03)	113	-	△113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312	30	△282	△90.4
○ 무형자산(440)	234	-	△234	순감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안)

2020. 2. 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59
II. 현황 및 여건	60
1. 청년세대 농어업·농어촌 유입실태	60
2.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64
3.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68
III.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	70
1. 기본방향	70
2. 주요 부문별 방향	72
[참고1]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현장토론회 결과 ..	82
[참고2]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세부내용	86
[참고3]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세부내용	89

I. 추진배경

-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4.7%이고,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0.7%에 불과함
 - 앞으로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체를 어떻게 길러내는가가 농정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임

- 최근 귀농어·귀촌 증가 추세 속에 30대 이하 청년계층의 농어업·농어촌분야 유입이 두드러짐
 - 청년 세대에게 농어업·농어촌 분야는 개인 삶의 취향이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음
 - 최근 농업분야(농가 경영주, 상용근로자) 30대 이하 청년계층의 증가는 정부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농업법인체 관련 지원 사업 등

- 청년을 위한 초기 정착(일자리, 생계비 지원) 등은 확대되었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
 - 초기 일자리, 생계비 지원 종료 후 안정적 정착 여건 마련이 과제임
 - 농업 관련 분야 정책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 창업·취업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됨
 - 청년을 위한 단계적 정착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유기적 지원 체계와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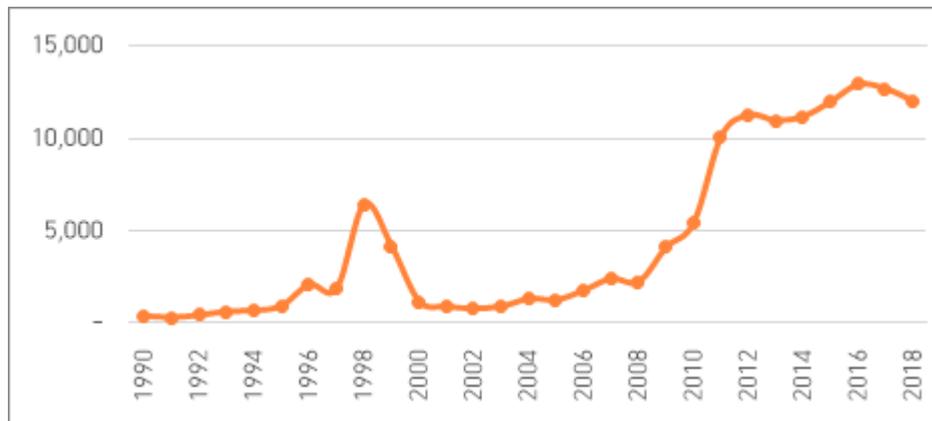
II. 현황 및 여건

1. 청년세대 농어업·농어촌 유입실태

□ 유입 현황

- 2000년대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귀농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이후는 연간 1만 가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귀농가구 변화(1990~2018)]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귀농통계

- 귀농 가구 중 39세 이하 가구원 수의 비중이 약 24~27%를 차지함
 - * 2013년 27.9%에서 2018년 23.7%로 다소 비중이 감소하나, 여전히 20% 중반대를 유지

[귀농가구(원)수 중 39세 이하의 비중]

연령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17,856
0 - 39세	4,834	4,877	5,108	5,307	4,788	4,233
0-39세 비중 (%)	27.9	27.1	25.7	25.8	24.4	23.7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귀농 귀촌 통계

□ 유입 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에 걸쳐 **농촌 지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대 이상 세대뿐 아니라 20~40대 연령층에서도 농촌 지향성이 높음(엠브레인 조사결과, 2018)
 -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지향 흐름과 더불어 반농반X(半農半X) 삶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청년세대에게 농어업·농어촌 분야는 개인 삶의 취향이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매력적으로 생각됨**
 - *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30.7%), ‘가업 승계’(18.1%)가 많았으며, 귀촌 이유는 ‘가족 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려고’(22.4%),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14.6%),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6%), ‘자연 환경이 좋아서’(13.6%) 등이었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갤럽 2018)

- 그러나 유입되는 청년들의 요구와 여건은 **연령별로 다양함**
 - 20대(졸업예정자)는 탐색의 기회, 일자리 경험이 있는 30대는 의미 있는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여건을 중시
 - * 연령에 관계없이 ①농어촌 삶에 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②소모적인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③풀타임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일거리를 희망함
(이미화, 서울시·경북도 도시청년지역상생사업 면접결과, 2019)

□ 청년 유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정책의 혼선

- 최근 청년 유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농어촌 현장의 관점 차이가 큼
 - 청년들 : 도시 삶과는 다른 개인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기대
 -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의 후계자(젊은 일꾼)로서의 청년 기대
 - 정책 당국 : 인구 소멸 및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일자리 마련

[관련 주체들의 입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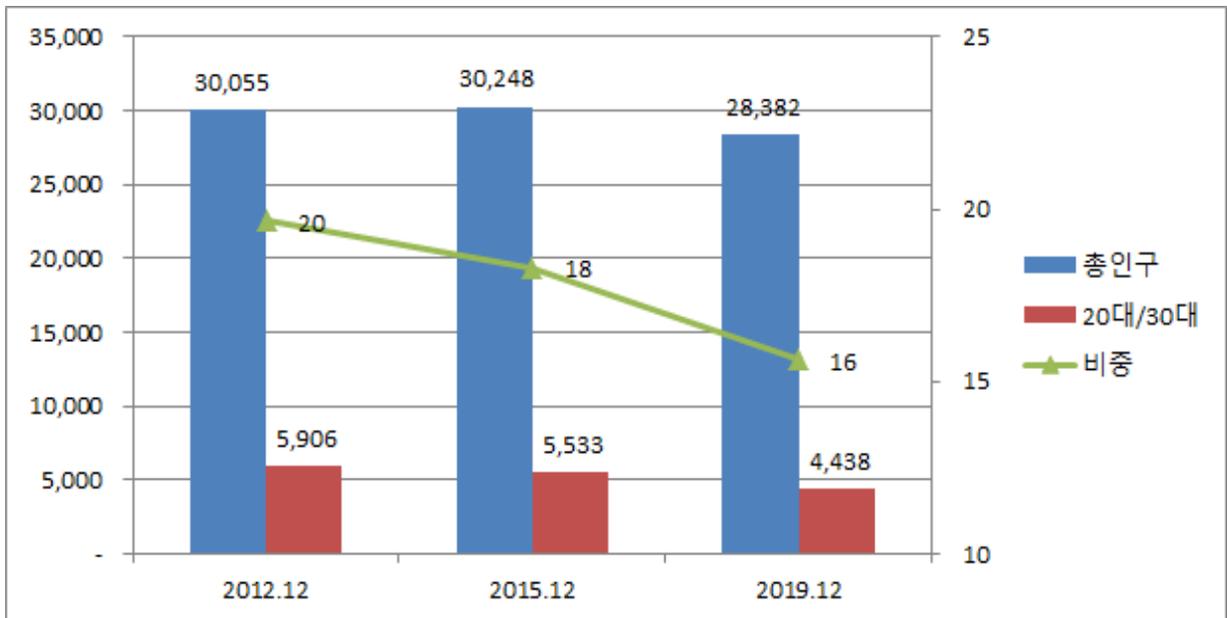
	가려는 자(청년)	받아들이는 자(농어업인)	정책 당국
기대	다른 삶의 기회	농촌(마을)·농업 후계자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인구 유입
주요 관심	삶의 여유와 새로운 기회(일거리)	젊은 일꾼, 인력충당	일자리, 생계비 등 정착지원

○ 기존 거주 청년들의 유출 억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청년 유입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함

- 농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군단위 경우 20대와 30대 인구가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5~20%를 차지함

* 전북 순창군 경우 20~30대 인구가 약 4,400명(전체 인구의 16%)이나 거주 (이 중 면단위 거주가 약 53% 단, 주민등록인구 기준)

「순창군 총인구 중 20대/30대 인구 비중 추이(단위 : 명)」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 이런 관점 차(미스 매칭)가 청년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여러 가지 상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농촌이주 지원은 정착의 단계에서만 가능(주소지를 옮기거나 농지 원부를 가져야만 지원)하지만 **청년들은 탐색과정의 지원도 희망**
 - * 청년들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1~3년의 시간을 요구. 또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실패로 보지 않기를 원함. 소위 실적(정착)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을 요구(신소희, 2018,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청년들은 일자리 보다는 **일거리, 반농반X,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실현을 중시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업 일꾼을 희망**
 - 정책 당국은 일시적 생활비, 급료 지원을 통해 유입 규모의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에 **농촌 현장에서는 유입 숫자보다 적은 인원이더라도 농업농촌에 장기적으로 정착 가능한 사람을 더 희망함**
- 아울러 농촌 현장에서는 청년 등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방지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청년층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 (다만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 인구 사이에 차가 적지 않으므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
 - 이들의 유출을 어떻게 막고 정착을 유도하는가도 과제임
 - * 유럽의 농촌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유출을 억제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영농 분야 청년 실태는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으나, 농촌 서비스 부문에 참여하는 **청년의 존재 형태나 실태에 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점도 정책 설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2. 농어업·농산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① 농어업분야 정책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관련사업** 대상자에 포함하여 정착지원

* 연간 1,600명, 월 100~80만원을 3년간 지원

** 맞춤형 농지 지원, 후계농귀농 자금 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컨설팅, 귀농인의 집 등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지원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전문인력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지원

○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장에서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실습

○ 수산계고교 대상 실습장비 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목적 어업실습선**을 활용한 승선실습 확대로 간부 어선원 양성

* 전체 수산계고교(9개교) 대상 공통 교육프로그램(승선훈련·취업연계 현장실습 등) 및 고교별 자체 교육프로그램(자격증 취득 등) 등 지원('19년 28억원)

** 한미르호, 1,520톤급, 건조기간 3년('15~'18, 332.7억), 승선인원 83명, 해양수산연수원 운영

○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영어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계속)

* (용자규모/용자기간) '19년 1,020억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농산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유희시설을 리모델링, 귀농·귀촌인의 공동 또는 개인 창업공간 조성
- 산림 일자리 발전소 사업(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청년 일자리 발굴·제공을 지원. 지역정착, 창업투자생태계조성, 민간취업연계형 3개 유형으로 실시
 - * 지역정착형 경우 월 200만원, 2년 지원(3개 유형 총예산 연간 약 2,000억원)
- 관광두레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시설, 농산물판매장, 마을공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경영공동체가 활용 및 운영·관리하도록 지원
- 문화이모작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예비 문화리더 교육
- 지역문화인력 양성/매치사업(지역문화진흥원)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인력과 문화시설의 매칭을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시설에 안정적 고용여건 제공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청년 등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융자)
 - *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자금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 유도
 - * 어업경영 3년 이내 청년 어업인(40세미만)을 선발, 최대 월 1백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

③ 지자체의 관련 정책

○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형태

-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북도의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 * 연령 초과로 제외되는 만 41~45세 창업농에게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
 - * 중앙정부의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자 2% 중 1%를 추가로 이차 보전
 - * 기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 비용의 50%를 3년간 지원하며,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50%도 지급
 - *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실시 중

○ 주목할 만한 지역의 독자적인 사업의 전개

- 경북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
 - * 청년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촌마을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 또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이 있는 지역 공동체 지원
- 경북 도시청년 시골과견제
 - *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범시행중인 사업으로 도시에서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경북에서 창업의향을 가진 청년들을 공모로 선발해 1인당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환)
-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 충남도 지원 예산으로 13개 시군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총 49명의 인건비 지원
 - * 여기에 수탁법인의 마을 사업 별도 수행 인력(역량강화사업, 중심지활성화, 마을조사단 등)까지 포함하면 총 66명의 일자리를 창출
- 완주군 청년 주도의 JUMP 프로젝트('19년부터 JUMP-UP 프로젝트)
 - 청년 주도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 청년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청년 주도의 사업 발굴 → 청년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마련(청년정책 팀)
 - Job(일하다: 취업, 창업), Union(머물다: 주거, 정착), Moim(어울리다: 참여, 교류), Pride(성장하다: 문화, 교육, 복지), 4개 부문의 종합적 지원책 마련과 청년활동생태계, 성장플랫폼 조성, 청년참여 할당제 실시

4 평가와 시사점

- 최근 다양한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유입 또는 사업 초기 지원과 일자리 기회는 상당히 확대됨
 - 신규 청년창업농 영농지원(농림축산식품부) 경우 연간 1,600명, 지역주도 청년일자리(행정안전부) 경우 3개 사업 유형 중 지역정착지원형만으로도 연간 약 1만 명 지원
- 그러나 일시적 임금·소득 보조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농촌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는 미지수
 - 청년창업농 영농지원(농림축산식품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행정안전부) 사업 모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최종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와 사례 청취를 통해 볼 때, ①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일자리 내지 정착 가능성의 불확실성, ② 개별 인적지원에 기인한 지역발전 내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여 부족, ③ 종합적 지원 체계(플랫폼 구축)와 담당 창구 구축 미흡 등의 과제가 있음
- 한편 영농 창업이나 농업법인 취업을 통해 기반이 없더라도 농업으로 농촌에 정착을 도와주는 정책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농어촌 생활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대상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되어 있음

3.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사례

① 농어업분야 정책

- **프랑스** 청년 취농자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 젊은 농업인의 정착 및 조건불리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자에 대해 영농개시 시에 용자금 지원, 세제 및 보험료 혜택, 농지 우선 취득 지원 등
- **일본** 농업차세대인재 투자자금(구 청년취농금부금)
 -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유입자를 두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구분 지원

②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 **EU LEADER**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 농촌혁신을 지원하는 LEADER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층의 실험과 도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행동그룹(LAG)에 청년층 참여를 장려
- **EU 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 EAFRD) 틀을 통한 지원
 - 비농업분야 창업 지원(Business start-up aid for non-agricultural activities)의 자금지원(M6.4: Support for investments in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on-agricultural activities)
- **EU EMRA**(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
 - EMRA는 농촌활동가*(농촌 애니메이터)로 일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갖춰야할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 * (농촌활동가의 역할) 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 형성 ②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리더십 개발 ③ 조정과 관리 능력을 가지고 발전계획의 실행에 참여 ④ 지역토호세력, 의사결정자와 지역주민(공동체)간의 조정 및 중재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2009년 총무성에 의해 과소지역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이후 아베 내각에서 지역창생전략의 주요 전략으로 확대 실시
- 지자체가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교토)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에서 도시 주민을 받아들여 ‘지역부흥협력대’ 로 위촉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3년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정주·정착 지원

* 지역브랜드화, 지역특산품의 개발·판매·프로모션, 도시주민의 이주·교류의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 지원 등 지역협력 활동(대원 1인당 연간 400만엔 지원)

○ **일본** 집락지원인(구 지역부흥지원인)

- 2004년 니가타현, 추에츠 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목적으로 조성한 ‘니가타 현 추에츠 대지진 부흥 기금’ 으로 ‘지역 부흥 지원인’ 제도를 설립하였으며 이후에 재해 지역이 아닌, 일반 한계집락의 유지·활성화를 위하여 집락지원인 시책 시행
- 지역 실정에 밝은 인재로 집락대책 추진에 관한 노하우·지식을 가진 인재를 ‘집락지원인*’ 으로 위촉, 1명당 연 350만엔 지급

* 집락지원인은 집락의 상황 점검,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정촌 간의 대화 촉진 역할 등 수행

3] 시사점

-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들의 진입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농업뿐 아니라 농촌지역 활동가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노력이 돋보임
- 청년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활동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활동 체계 구축과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Ⅲ.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농어업·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 혁신할 새로운 주체로서 청년층의 육성이 필요함
 - ‘농업 후계자 육성’ 또는 ‘인구유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어업·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층의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농산어촌 정책을 경쟁과 효율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기능 농정을 위해서는 농어업 6차산업화를 비롯하여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 관광 등 농산어촌 자원을 광범하게 활용한 농산어촌 활성화가 필요
 - 이를 담당할 새로운 주체로서 청년층 육성(기존 청년층 포함)을 위해 획기적인 청년층 육성 전략과 정책 필요
 - 청년층이 떠나고 싶은 농촌에서 살고 싶고, 도전의 기회를 발견하는 농촌으로, 이를 지원할 종합적 지원 대책과 장기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함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산어촌]

1. 경제적 현실(직업)과 삶의 가치 지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
 - 영농기반 확보, 창업·취업 여건 보장
 - 여유 있는 삶, 환경·문화적 가치 보장
 - 개인의 재능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2.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
3. 사회적 평균의 문화교육복지와 노후 대비가 가능한 곳

○ 농산어촌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

① 건강한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세대 주체 육성

- 청년 유입 규모보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층의 발굴, 육성
- 일시적 지원보다 안정적 일거리, 장기적 자산 확보 지원
-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반과 환경 마련

② 지역과 청년의 통합

- 개인지원보다는 지역공동체 지원(예 : 경북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사업)
- 협업적 생산조직에 청년층 참여 확대, 사회적 협약(제3자 승계)과 지역 생산조직의 공동 대응, 공동자산 활용

③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적 역할 마련

- 지역 자원/자산을 활용한 지역 기반형 창업 활성화
- 지역 수요형 사회적 경제영역 확산, 사회서비스 등 비경제적 영역 활성화
- 각종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청년 참여 확대
-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 참여 활성화(청년위원회, 농업회의소 등)
- 농촌개발사업 전문인력의 내부화(지원조직, 전문가 운용 제도 등 확대)

④ 지역의 수용태세와 인식전환

-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위해 수요 측인 지역의 준비된 역량이 필요
- 청년층 유입에 대한 지역의 인식 변화(실패 용인, 신뢰와 포용)가 필요
- 전문 지원조직 및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

○ 정책 설계에 유의할 점

- 정책이 공급자 편리에 치중할 경우 청년층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괴리를 해소하고 조화점을** 찾도록 유의할 필요(청년의 농촌 활성화 역할 확대, PaYPiRD* 보고서, 2010)

* Policies and Young People in Rural Development (EU Framework Project FAIR6 CT-98-4171)

- 관심·탐색 단계, 이주 단계, 정착 단계로 나누어 이들의 **단계별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단편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조직 및 지원시스템 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존 농어업·농어촌분야 **청년 관련 정책·사업이 통합·연계되도록** 해야 함

2. 주요 부문별 방향(검토 안)

① 중점 추진 방향

(1) 다원적 가치를 담당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와 ‘생태계 구축’

- 현행 농어업·농어촌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임
 - 그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취·창업, 정착으로의 연계가 미약하고, 지역별 특성(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고려도 미흡함
 - 제대로 된 농산어촌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 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 공동체 등 종합적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함
 - 아울러 농산어촌의 마을별,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 차원에서 분야별로 단절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 정책사업이 창업(농업 포함) 관련 교육, 취업 알선, 생활비 제공, 자금 융자 등 단편적인 지원사업에 치중

[청년 농산어촌 정착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의 지원 내용]

사업명	주관 부처	지원 내용							
		교육	취창업	생활비 활동비	주거	융자	창업 보조	기간 (1년기준)	분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		○		○		장기	농업
농업법인 취업·채용지원	농식품부		○					장단기	농업
청년귀농 장기교육농장	농식품부	○		○				단기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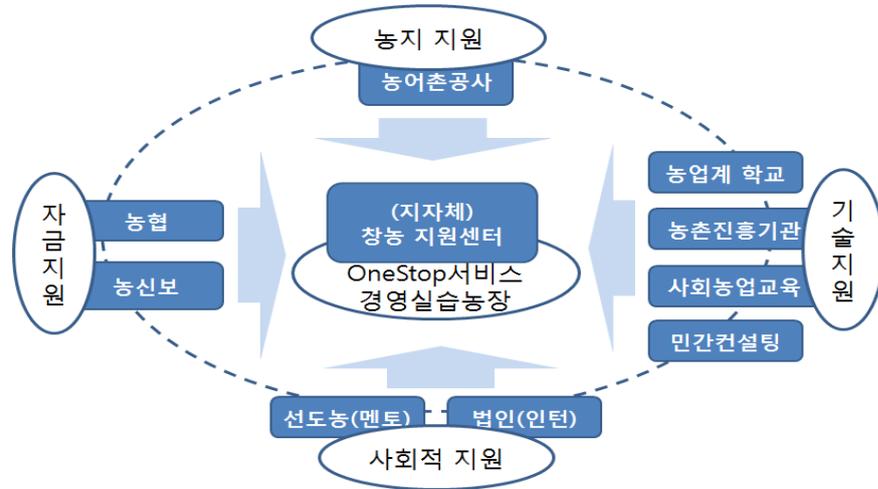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농식품부	○						단기	농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농식품부				○	○		단기	농업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농진청	○					○	단기	농업
산림일자리 발전소	산림청	○	○	○			○	장기	산림
수산분야 취창업 지원	해양수산부	○	○			○		단기	어업
청년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	○	○		장기	어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행안부		○				○	장기	농촌
관광두레	문체부	○	○	○				장기	농촌

○ 지자체 차원의 청년 육성계획 수립 및 생태계 구축

-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의 목표는 단순히 지역 인구 증가나 취업률 제고가 아님
- 청년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과 삶의 방식을 탐색하고, 관계망을 넓히며 자기 삶의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려는 청년에게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더불어 이들에게 주거시설과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 멘토링 등 정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탐색-유입-정착 단계에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창농 생태계 사례(안) : 창농상담 → 교육 → 정착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을 패키지로 전달하는 지역단위 전담조직인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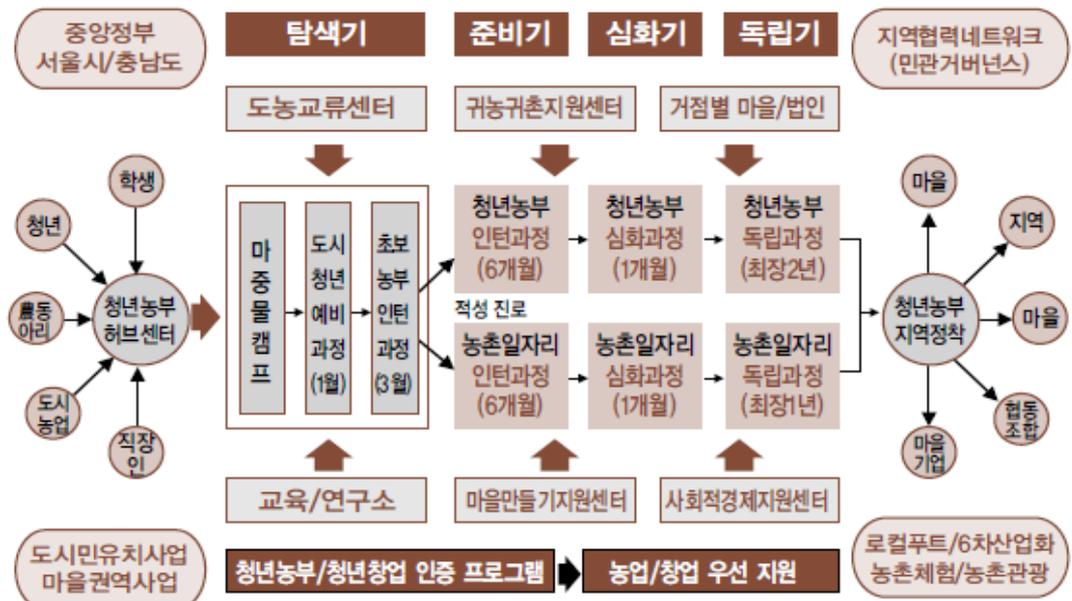
원스톱 창농지원센터(안)



자료: 마상진 등(2017)

-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생태계(홍성·예산 2030 사례) : 청년세대 창농을 ‘관심-탐색-준비-심화-독립’의 5단계로 나누고 일·학습 병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 홍성·예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체계



자료: 삼선복지재단(2017)

(2) 지역주도형 청년세대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청년주도 농산어촌
다원적 가치 실현 시범사업 실시

- 청년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의 필요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주기보다 청년이 먼저 충분히 시도해보고 또 지역사회와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문화와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
- 완주군 청년주도의 JUMP 프로젝트와 같이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주도로 혁신적, 실험적인 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패키지 식 접근)

- 사업 조건과 실시 방법

- 청년 주도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 청년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청년 주도의 사업 발굴 → 시범 사업(패키지) 신청 → 심사 후 지원 결정
-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에 청년 주도성 보장,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마련(청년정책팀) 장려
 - * 흥성·예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체계와 같은 지원 생태계 조성
 - * 청년 참여 정책 거버넌스 강화(순창군 사례)
- 기존 신활력사업, 일반농산어촌 사업 등 시행 시 청년 참여 할당제 도입 장려

[사례 : 완주군 JUMP 사업 내용]

일자리 진입 지원	주거·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 인턴제(마을, 지역공동체 등)→청년활동가 →공동체 창업 단계적 시스템 구축(예비→초기→발전 단계) · 청년 창업공동체 양성(50개소) 단계별 성장 시스템 조성 5개년, 50개소 양성 · 청년문화시장 운영 · 참여형 대학생 아르바이트 군정 체험, 워크숍 · 청년취업지원 사업 도내 청년 취업 시 사업체 임금 지원 ·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기업맞춤형 교육, 취업캠프 지원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장기) 생산, 체험, 판매, 문화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 하우스(청춘스테이션) 귀농 귀촌, 청년교류 등 숙박비 일부 지원(단기) · 청년쉐어하우스(청춘하우스) 도시형(삼례, 봉동 등) 귀농귀촌형(고산 등) · 완주살이 청년캠프 귀농귀촌+완주 관심청년 현장체험, 지역활동(2박 3일) · 청년 귀농귀촌 정책 확대 농촌형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청년 고려(20~30%) 선도농가 멘토링 사업 확대 청년 협업농장(장기) · 청년희망 대출 청년 대상 저리 대출 · 행복주택(공공임대)사업 활성화 삼봉신도시 행복주택 건설 등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인재양성·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성장플랫폼 조성 청년센터 운영(교류, 소통, 문화활동 컨트롤 타워) 베이스캠프 조성(고산, 이서 등)→청년 거점활동 공간 조성 ·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 소규모학습, 교류, 참여 · 정책네트워크천사(1004) 운영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등 청년포럼 운영 관련부서 네트워크구성 · 청년참여 할당제 각종 위원회 등 청년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 삼례문화예술촌활성화 등을 통한 청년 문화리더 양성 · 청년문화거리(특구) 조성 삼례문화예술촌-삼례시장-우선대청년문화 거리 조성 삼례문화예술촌내 전시, 공연, 강연 등 상설운영 · 청년 축제 삼례청년문화거리 내 청년축제 추진 · 청년(재능+지식) 공유 학교 청년들의 재능, 지식을 공유, 교류 기회 제공 · 청년 행복 매니저 운영 지역사회전문가 및 리더를 매니저로 위촉, 청년지도 응원 · 대학생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지원 지역사회 공익분야(사회복지, 공익이슈 등) 기여학생 장학금 지급

* (사례) 청년 정책 거버넌스 : 순창군 청년정책 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들이 그들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직접 개발·관리할 수 있게 일정 정족수를 청년들에게 배분 필요
- '순창청년 기본조례'를 '19년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부군수, 청년정책관련 부서장, 순창 군의회 추천의원, 청년단체 활동 경험자, 청년정책 협의체 임원 등 참여
- (청년정책협의체)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을 논의하며, 순창지역에 거주, 재학, 재직 및 기타 활동을 하는 청년 25명 이내로 구성됨

② 중앙 및 지방이 개선할 사업들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및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청년 관련 통합 행정 또는 전담 체제 강화**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과에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관련 행정 통계와 기획업무를 담당중이며, 농촌산업과(6차 산업), 경영인력과(농가, 법인체,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담체제 강화 필요

○ 농어업·농어촌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를 위해 **관련 통계 및 정보 체계 보완**

○ 농산어촌 청년층의 이주 경로, 거주 실태, 취·창업 실태, 생활기반, 사회적 관계망 등 **실태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전수 조사 혹은 사례지역 심층 조사) 보완

○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통합 **정보 플랫폼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사례) 미국의 Agcareers.com 민간회사

- 미국 전역의 농업계 대학과 농산업(농업, 식품,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일자리 연계
- 정기적인 고용 수요조사 및 관련 연구,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미국 농산업 일자리 고용정보 연결의 구심점 역할

○ 농어업·농어촌 소양교육 강화 및 농촌체험 기회 확대

* (사례)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 다른 지역 주민이 5일부터 60일간 전남지역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 농촌형 30개 마을농가 운영자를 선정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 조성운영

○ 농어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 지역별로 농어촌개발 중간지원조직(충청남도나 전라북도의 사례)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근자의 발굴과 양성, 재교육 시스템 미비**
- * 농업기술교육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농촌개발 인재양성과 발굴 체제는 미흡
- 지역개발, 문화,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여 기초-광역-중앙별로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재정비·강화**
- 지역 거점대학에 농산어촌 창업 개발 교육과정 개설, 광역단위 농어촌개발 연수과정 설치, 중앙 정부 차원의 EU EMRA*와 같은 농어촌개발 학위과정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보완 필요

* (사례) EU EMRA (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

- 농촌활동가(농촌애니메이터)로 일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석사 학위 과정(유럽 내 7개 대학에서 참여 운영 중)
- 농촌활동가에게 잠재적 농촌개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개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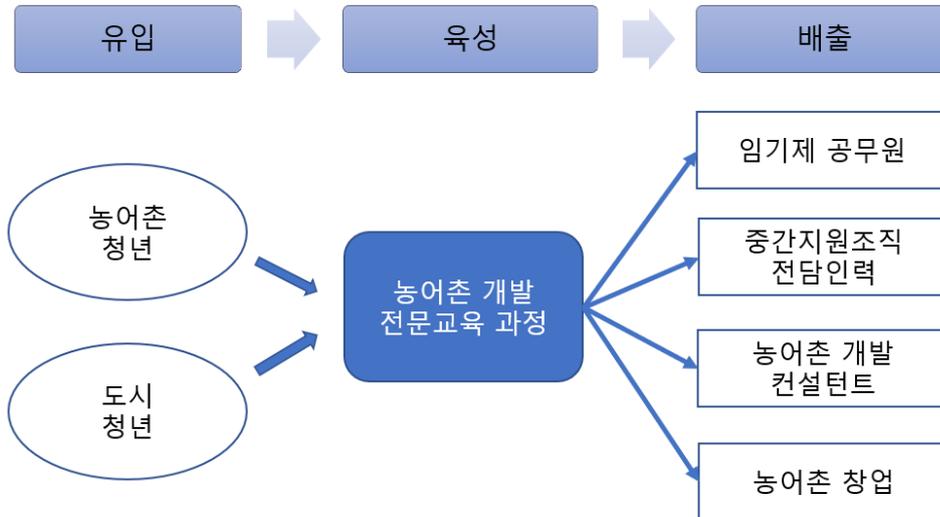
○ 농어촌 지자체의 ‘좋은 일자리’ 확대

- 농산어촌지역개발 관련 전공의 석박사 과정이후 농촌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적극 발굴·제공**
- * 임기제 공무원,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지역밀착형 컨설팅 기관 등
- 수도권 대도시의 청년인재가 농어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 도시 중간지원조직 유경험자의 귀향·귀촌 지원
- * 정기적인 채용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 지역별 농어촌 청년 활동가 지원센터 구축

* (사례) 순천시 낙안면 면장 공모

- 읍면단위에서 처음으로 개방형직위로 귀농인을 낙안면장으로 선정함

[농어촌 활동가 및 전문인력 유입·육성·배출 체계(안)]



③ 청년농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 방향

○ 청년농 정착 애로사항 (정착 단계별)

- 영농 준비 : 영농기반, 영농기술, 멘토, 주거 등의 곤란을 호소
- 창농 초기 : 경영자금, 농지, 생활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 정착 이후 :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

○ 정책 및 관련 사업 문제점

- (정책 자금) 융자 금리(2%)가 다소 높고 거치기간도 짧음
- (농지 확보 어려움)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 농지 매매·임차에서 이 사업을 통해 거래되는 농지가 많지 않으며 좋은 농지는 기존 농민들의 사적 거래로 신규 청년들에게는 오지 않음
- (창농 교육의 질 문제)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의무 교육(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양적으로 교육들이 충분하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며 창농 준비 및 초기 정착에 선도농가실습(멘토 사업) 요구도 높지만 사업량 및 현장 멘토가 매우 부족

- (창농지원 유관기관 간의 연계 미흡) 중앙 정부(상담)와 지방 정부(정착), 지역 내 기술, 자금, 농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체제 미흡(분절적 서비스 제공)
- (청년들의 지역 농정 참여기회 부족) 공무원의 일방적 기획, 실행 체제와 구색맞추기식 청년 참여도 제약

○ 해소 방안

- (기본방향) 지역단위 참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착단계별, 창농유형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다양한 도전과 실험, 실패와 재기를 할 수 있는 창농생태계 구축

① 농가 경영승계 지원

- 고령농업인이 후계자에게 조기 승계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가족경영협약* 체결 적극 지원
- *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의 경영분담, 수익분배, 근로조건, 장래경영이양 등

②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

- 농업법인 인턴 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홍보 강화
- 농업계 학교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및 사업규모 확대

③ 영농기반 사회적 승계,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 활성화

- 다양한 사회적 경영승계 모델(고령농→청년농, 청년법인, 마을단위 경영 승계) 개발

④ 청년 창농법인 지원

- 청년들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체 설립 시 지원 강화

⑤ 창농 준비과정 지원 강화

- 농업경영실습 농장 조성·운영 확대 등 창농 초기 지원

④ 수산업 · 어촌 청년 활성화 정책 방향

-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어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
 - 전국 어가 수는 51,494호, 어가인구 116,883명으로 빠르게 감소
 - 어촌 인구는 60세 이상의 전체의 51.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심각
- 수산업 · 어촌의 특징
 - 수산업은 어촌계라는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작업 · 분배하는 구조
 - 마을어장, 양식어장 등에 대한 소유는 국가에 있고 어촌계에서 이용하여, 농업과 근본적인 생산구조 차이
 -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에 대단위 자본 및 시설 투자 필요
 - 어촌, 도서(섬) 등은 농촌보다 더 고립되어 있어 더 폐쇄적임
- 수산업 · 어촌 청년정책
 - 수산업 · 어촌의 청년정책은 주로 귀어 · 귀촌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하여 귀어 촉진을 통한 선도어업인 등을 ‘귀어닥터’로 임명하여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현재 후견인 제도도 운영)하는 시책 외에,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청년어촌정착자금 제공(18년 100명, 월 100만원 보조금), 귀어학교 운영 등
- 청년 귀어 · 귀촌정책의 문제점
 - 현재 귀어인 수는 ’ 13년 690명에서 ’ 18년 98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중에는 어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발생
 - 수산업의 특성 상, 어촌의 폐쇄성 및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촌계 가입 등이 불가능하여 귀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어인 중 대부분이 낚시어선을 운영하여 기존 어업인과 마찰 및 갈등 심화
- 일본의 아마구치현어협 다부세지소 ‘신선 다부세’ (日 아마구치현 다부세정)와 같이 어협이 외부에서 젊은 취업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어촌으로 유도하여 귀어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추후 보다 심층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

① 전북지역**1. 개요**

- (일시·장소) '19. 11.7(목) 14:00~17:30 / 전북 순창 방랑싸롱*(복합문화공간)
- 참석인원 : 총 31명
 - (외부) 전북 및 순창 공무원, 순창지역 청년 등 22명
 -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곽은경사무관 등 9명
- 주요 내용
 -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
 - 2020년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전북 김선구팀장)
 - 2019~2020년 순창군 청년정책 추진계획(순창 이도윤계장)
 - 순창청년들의 사례(귀농귀촌, 문화, 지역혁신 등 청년활동 분야별) 발표
 - 지역 리브랜딩,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BOVO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장재영)
 - 4H 청년활동 사례(순창4H 박기완회장, 흥봉진사무국장)
 - 순창의 바른 먹거리, 소비자 안심 구매(오지네협동조합 대표 신성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소나기프로젝트(문화기획 방랑싸롱 설자연팀장)
 - 소농의 비빌언덕 되어주기(소소한 방아실 대표 이유미)
 -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

2. 토론내용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군데서 얻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정보를 한군데서 받아서 조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 정책개발단계에 청년 참여

- 다 만든 후 이런 정책이 있다 하지 말고 정책수립단계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자원 강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사회적 관계 중요

- 현재 농업종사자나 농촌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행정과 자본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더 중요한 자산은 사회적 자산인 관계임

□ (기타 의견)

-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부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등 좀 더 세심한 접근 필요
- 외지인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이 많다 보니 기존 농촌청년에 대한 소외 발생
- 농업이외 다양한 일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임업경영체에 대한 청년창업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주체가 중요한데 순창지역은 청년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토론회(전북 순창) 장면

② 강원지역

1. 개요

□ (일시·장소) '19. 11.21(목) 14:00~17:00 / 강원 홍천 용오름체험휴양마을

* 강원 홍천군 서석면 검단길 263 (검산리 326-1)

□ 참석인원 : 총 16명

- (외부) 강원 및 홍천 공무원, 강원 및 홍천지역 청년 등 9명
-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임성규 팀장 등 7명

□ 주요 내용

- 강원도와 홍천군의 청년농업인 활성화 및 육성 정책 발표
 -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여건 및 향후계획(강원 우태군주무관)
 - 홍천군 청년농 육성 계획(홍천 박광근주무관)
- 강원 및 홍천 청년들의 사례 발표
 - 용오름맥주마을협동조합 사례(홍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단장 정운희)
 - 자연의 순수함을 담다(농업회사법인(주)푸르린 대표 이민서)
 - 정직한 농부의 마음으로 믿음을 키우는 록야(농업회사법인 록야 대표 박영민)
-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

2. 토론내용

□ (원주민 청년 지원)원주민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마련 필요

- 귀농·귀촌 정책으로 외부청년을 유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승계농 등 원주민 청년계층이 배제되는 현상이 있음. 외부청년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이 유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
 - * 청년창업농지원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3년차로 제한된 점 등
- 단순히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지원을 제한하기 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 효과 제고 필요

- (기초생활 보장) 청년수당, 농업직불제, 초기 주거공간 제공 등
 - 청년들이 귀농·귀촌시 초기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정착할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청년수당, 농업직불제 등 필요
 - 빈집 등을 활용하여 초기 정착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 청년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와 멘토링 제도 활성화 요청
 - 농촌에 또래 청년이 적어 청년들이 살기에 너무 외로운 사회가 되었음. 농촌청년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농부의 농사법 등 멘토링 제도 활성화 필요
- (홍천 청년농업지원제도 구조) 이원화된 지원 구조 일원화 필요
 - 현재 홍천군의 청년농 지원제도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된 구조라서 청년지원에 혼선이 있으므로 향후 지원구조의 일원화 필요
- (기타 의견)
 - 지역에 청년이 없다보니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소수 청년들에게 과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인구가 줄다보니 경제활동과 결혼의 어려움 등 정착하기에 어려운 여건임
 - 고령농의 은퇴 및 사망으로 인한 유휴 농지, 빈 건물이 다수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망
 - 강원도는 삼남지방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징을 고려한 청년정책이 만들어 지면 좋겠음 * 경작면적, 기후 등 열악한 상황



‘현장특특’ 토론회(강원 홍천) 장면

1 농어업분야 정책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대상)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및 관련사업 대상자에 포함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과 기간 차등하여 월 80~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가능
 - (관련사업) 맞춤형 농지 지원, 후계농·귀농 자금 등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컨설팅·교육 등, 귀농인의 집 등 주거 지원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대상)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지원내용)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월보수의 50% 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대상)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지원내용)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목적)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 정착, 농촌 유입 유도 및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대상) 만 40세 미만의 귀농예정 청년, 10개 교육기관 공모·지정
 - (지원내용) 농장에서 6개월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실습
 - * '18년 실적 : 계획인원 50(수료 42) / 교육만족도 92.3 / 정착률 88.1%

② 농산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유희시설(창고,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공동 또는 개인 창업공간 조성(개소당 300백만원)
- 산림 일자리 발전소 사업(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목적)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산림분야 경영체의 창업 지원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원내용) 그루경영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1차년도) → 멘토링 및 마케팅 지원으로 성공창업과 경영개선(2차년도) →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마케팅 강화(3차년도) → 지속 성장 및 모범사례 육성(4,5차년도)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농어촌관광 실수요층에 대한 정보제공
 -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도시민·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 농어촌관광 자원조사로 관광주체에게 정보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지역 일자리·소득창출을 위한 ‘농촌관광기업’ 육성
 - 마을 공동협의회(9개 도협의회) 육성, 체험마을 자생력 제고 지원
 - 웰촌포털 활성화 및 앱개발 경진대회 등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 (내용)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별) 지역정착, 창업투자생태계조성, 민간취업연계 형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 지원
 - * 지역기반 법인 및 단체에서 최초 2년간 지원 받은 후 3년차에 취·창업할 경우 1년간 추가지원(2년간 연 2,400만원 내외 임금 지원)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동창업공간 입주나 중소기업 취업 등 다양한 취·창업 애로 해소 지원
 - * 공동창업공간, 임대료 등 창업관련 비용, 창업역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민간취업연계형) 문화, 복지, 안전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의 일 경험과 구직활동 지원
 - * 1년간 월 180만원 내외 임금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과 같은 구직 활동 지원

[광역지자체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지자체	사업명	사업개요
충남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지역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활동가로 육성,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에게 지역일자리 제공 및 교육비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청년 도제 교육생을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에 배치하여 전문기술 전수, 인건비, 교육비 등 지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마을공동체 특산물 유통 활성화
전북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교육 훈련 제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 청년현장 활동가육성	농촌전문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지원
경남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기회 제공(인건비, 교육 등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	청년 사무장 채용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홍보·운영 지원
경북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금 및 정착지원금 등 지원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	농업법인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2019). 내부자료.

- 관광두레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내용)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및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관광시설, 농산물판매장, 마을공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경영공동체가 활용 및 운영·관리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경영 체계구축
- 문화이모작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문화기획·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단체(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및 주민공동체 활동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경험이 있는 일반기관·단체(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예비 문화리더 교육
- 지역문화인력 양성/배치사업(지역문화진흥원)
 - (목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인력과 문화시설의 매칭을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시설에 안정적 고용여건 제공
 - (지원내용) 지역문화인력 인건비(월 200만원)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지역문화인력 역량 지원

1 농어업분야 정책

○ **프랑스** 청년 취농자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 (목적) 농촌의 후계인력난, 농정개혁,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젊은 농업인의 정착 및 조건불리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인구 유지 목적 추진
- * '92년 공통농업정책개혁 이후 '95년부터 청년취농정책이 충실히 추진됨
- (지원내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자에 대해 영농개시 시에 용자금 지원, 세제 및 보험료 혜택, 농지 우선 취득 등

프랑스의 신규 취농 지원 단계

- * 신규취농정보센터(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에서 상담 및 자기진단 서비스 제공
 - 신규취농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상담가가 자기진단조사지를 토대로 신규취농 희망자의 현재상황을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움
- * 맞춤형 전문화 계획(PPP: 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e) 작성
 - EU나 각국, 지방정부의 신규 취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PP가 요구됨.
 - 개인의 기술수준, 자기진단 결과에 따라 작성
 - 21시간의 의무교육 + 신규취농자가 희망하는 훈련, 인턴십 (주정부와 VIVEA 재단에서 훈련비 지급)
- * 경영발전계획(PDE: Le Plan d'Entreprise) 작성
 - 향후 5년간 예비적 재정적 기술적 계획
 - 5년 시점에 최저 소득에 1~3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PPP와 더불어 주정부가 승인
- * DJA 및 용자 지원 조건
 - 프랑스나 EU 국적 또는 취농 이후 5년간 프랑스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회원국민
 - Agricultural Baccaureate + 주정부에 승인된 PPP
 - 주정부 인정 ODP
- * 의무이행사항
 - ODP에 따라 5년간 영농종사(지급 조건에 따라 1차 직업/ 2차 직업으로) - 장부 작성(5년)
 - 모든 농장시설은 환경보호 규정 준수(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 기준 충족(3년)

○ **일본** 농업차세대인재 투자자금(구 청년취농급부금)

- (도입배경)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4년 4월부터 ‘신규 취농 · 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 실시
- * <목표> 신규 취농하여 정착하는 농업인 2배, 10년 후 40대 이하 농업인 40만 명으로 확대
- ** 2014년도부터 청년 등 취농 계획 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자리 매김

- (운영현황)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지원

① 준비형 : ‘연수계획(연수기관 또는 선진농가나 법인에 1년 1,200시간 이상 연수)’ 을
도도부현 또는 청년농업인 육성센터 등에 제출, 150만엔을 최장 2년간 지급

② 경영개시형 : ‘청년 등의 취농계획’ 을 시정촌에 제출, 경영비용으로
독립·자영 취농자에게 최대 150만엔을 최장 5년간 지급

* 부부 공동 취농 시 1.5배 지급. 복수의 취농자가 농업법인 신설하고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각각 150만엔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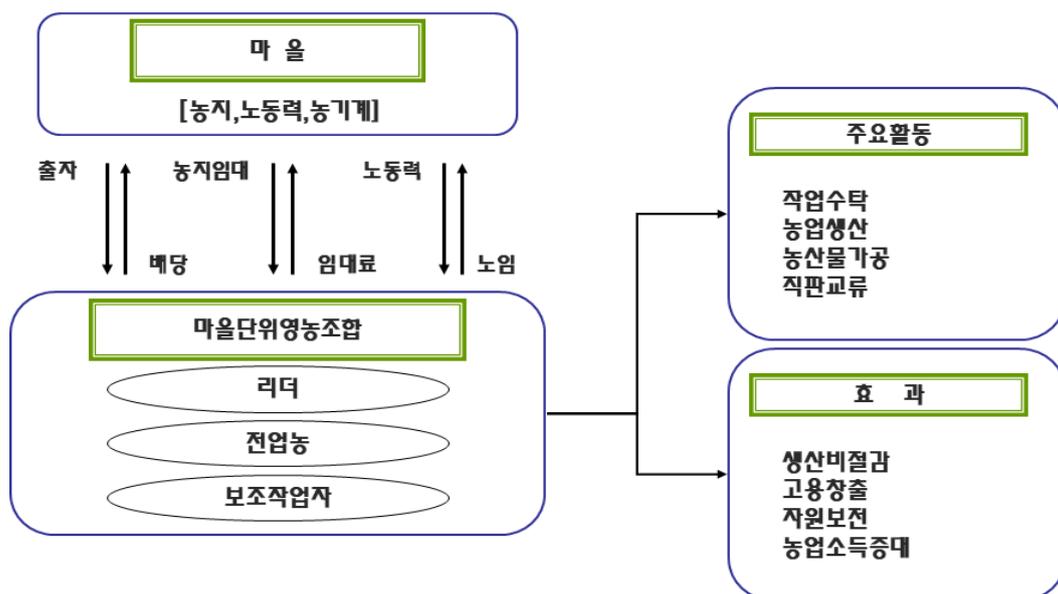
○ 일본 집락영농

- (개요) 농지의 집단적·계획적 이용을 통해 생산비용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영농 방식

* 농지는 개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 경영, 일본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화 함

- (주요 성과) ① 농지이용의 효율화, ② 집단적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③ 겸업농의 이탈 방지 ④ 지역 활성화(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공동체 활력 증진 등) ⑤ 신규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하는 초기과정
으로서의 유용성(후계 인력 확보에 기여)

[집락영농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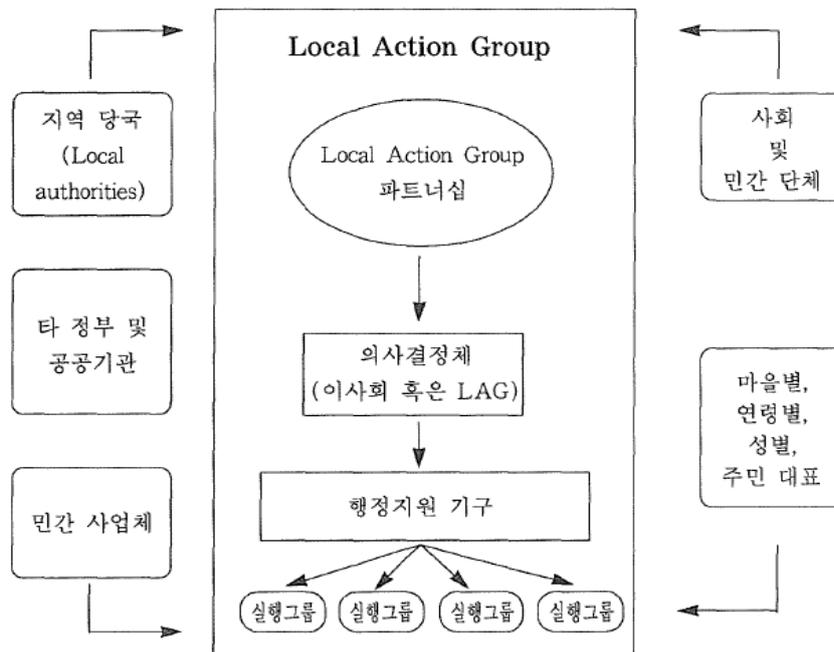


②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 EU LEADER 프로그램

- (목적) 농촌의 후계인력난, 농정개혁,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젊은 농업인의 정착 및 조건불리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인구 유지
 - * 농촌지역정책의 유럽적 모델이라 불릴 만큼 큰 호응을 얻음
- (내용) LEADER 프로젝트의 핵심인 지역행동그룹(LAG)*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
 - * (지역행동그룹) 연구단체, 문화·지역서비스 공급자, 기관, 전문단체(농민, 비농민 등),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평균10~16명)
- (주요 청년 지원 활동) LEADER 프로젝트의 실험적, 혁신적 농산어촌 사업에 청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행동그룹(LAG)에 청년 참여 장려

[LEADER 지역활동그룹의 구조와 파트너십]



○ EU EMRA(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

- (내용) EMRA는 농촌활동가*(농촌 애니메이터)로 일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유지시키고,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 또는 복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촉진하는 사람

- (EMRA의 농촌활동가 지원) ① 잠재적 농촌개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 제공과 동시에 농촌개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지원 ② 직업적으로 자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농촌개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인문, 사회과학, 지리, 농업, 경영 등 관련분야 졸업생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 우선 대상
- (EMRA 교육과정) 총 4학기로 구성, 1학기는 핵심과목 2학기과 3학기에는 총 6개 모듈 가운데 3개 모듈 선택, 4학기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
 - * 2학기과 3학기 사이에 농촌조직에서 현장학습 진행, 10일간 대면 세미나 참여
- ※ (농촌활동가의 역할) 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 형성 ② 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리더십 개발 ③ 발전계획의 실행에 참여 ④ 지역토호세력, 의사결정자와 지역주민(공동체)간의 조정 및 중재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도입배경) 2009년 총무성에 의해 과소지역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이후 아베내각에서 지역창생전략의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
- (사업개요) 지자체가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교토)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에서 도시주민을 받아들여 ‘지역부흥협력대’로 위촉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3년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정주·정착 지원
 - * 지역브랜드화, 지역특산품의 개발·판매·프로모션, 도시주민의 이주·교류의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 지원 등 지역협력 활동(대원 1인당 연간 400만엔 지원)
- (사업성과) 실시 초기에는 89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8년 현재 1,050개 지자체에서 5,359명의 대원이 활동 중이며, 정착률도 거의 60%
 - * 잘되는 곳은 겸업을 허용하거나 일주일에 2일은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일은 자유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종료 후에 창업 및 취업 유도

○ **일본** 집락지원인(구 지역부흥지원인)

- (도입배경) 2004년 니가타 현, 큐에츠 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목적으로 니가타 현 등에서 조성한 ‘니가타 현 큐에츠 대지진 부흥 기금’으로 ‘지역부흥지원인’ 제도 설립. 이후에 재해 지역이 아닌, 일반 한계집락의 유지·활성화를 위하여 집락지원인(총무성) 시책 마련(2009년 모든 지자체에 도입)
- (사업개요) 지역의 실정에 밝은 인재로 집락대책 추진에 관한 노하우·지식을 가진 인재를 ‘집락지원인*’으로 위촉, 1명당 연 350만엔 지급

